

2016 하반기

농식품 재정사업 리포트

A g r i f o o d F i s c a l R e p o r t

논단
재정사업 현안진단
거시경제 동향
2017년 국내외 금리 전망

거시경제 전망
농업부문 재정현황
부록



2016 하반기

농식품 재정사업 리포트

A g r i f o o d F i s c a l R e p o r t



| CONTENTS |

01 **논단**

06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부문 재정운용의 과제

02 **재정사업 현안진단**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18 현장점검 리포트
28 전문가 좌담회

03 **거시경제 동향**

45 경제성장	46 생산 및 소비
48 고용	49 금리
51 물가	52 환율
54 수출입	

04 **2017년 국내외 금리 전망**

58 2017년 국내외 금리 전망

05 **거시경제 전망**

77 세계경제	78 국내경제
79 민간소비	80 투자
81 수출입과 경상수지	82 물가
83 고용	84 2017 경제전망 기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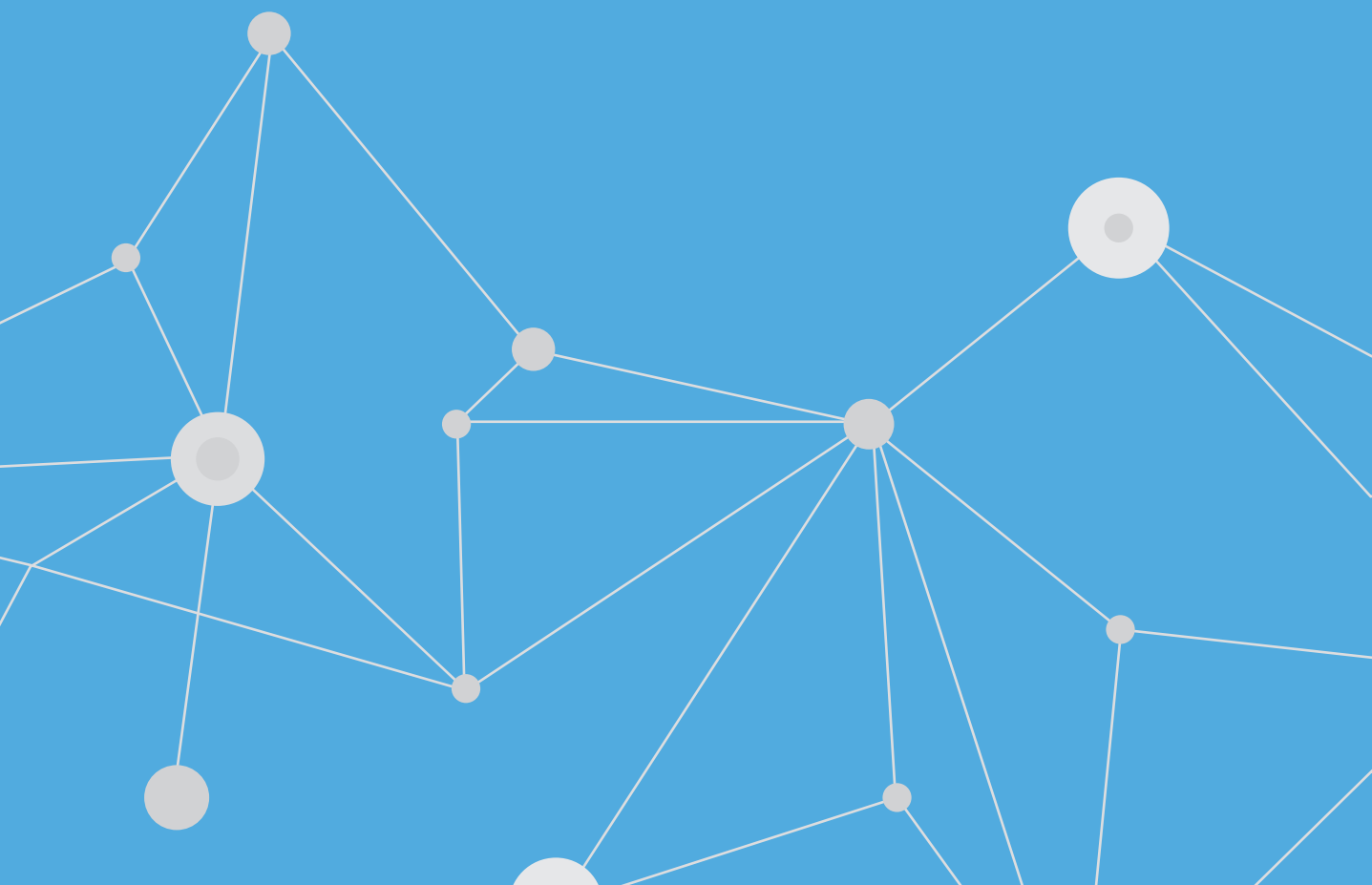
06 **농업부문 재정현황**

88 농식품부 2017년 예산 분석
95 보조 및 융자사업 분석

07

부록

104 거시경제 지표
116 2017년도 농식품부 사업별 예산현황



01 **논단**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부문
재정운용의 과제

01 **논단**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부문 재정운용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농업관측본부장



● 한국농업의 여건 변화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건변화를 보면, 먼저 농업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가주체가 변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농업생산을 담당하여온 세대가 은퇴하고, 새롭게 농업에 진입한 농가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지기반의 부족 등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여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신규 젊은 농업생산주체의 진입촉진이 중요한 농정과제가 되고 있다. 이들이 농업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여주는 것이 과제이다.

“
저금리 농업의
다원적 역할

지역단위
농정에 대한
대응 필요
”

전통적으로 농업정책에서 농업금융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자금 부족시대에 부족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는 위치를 담당하여 왔다. 농업의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금융시장이 저금리 자금공급과잉시대로 전환되면서 정책금융의 금리 이점보다는 금융의 접근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신용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농가의 금융접근도가 떨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농가부채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의미한다고 본다. 저금리시대에 적합하게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농업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식량생산만이 아니라 안전한 식품공급, 환경보호, 경관유지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이 다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자금지원에 대한 의무이행조건들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와 직면하고 있는 지자체의 기획과 조정 기능도 중요하다.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리와 농가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앙집권적인 자금지원 체계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농정의 전체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단위에서 품목별 수급 조절과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전국단위 보조지원보다는 지역단위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농정의 지방분권화 시대에 적합한 자금지원체계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 재정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네 가지 이슈

농업부문 재정지원체계는 사업내용에서 변화는 있었지만 과거 생산위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운용방식을 새롭게 재편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정운용체계의 개선은 농업발전의 관점에서 항상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 중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융자자금 등의
관리 개선 필수
”

첫째, 융자중심의 재정운용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예산은 기금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융자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 융자지원의 자금부족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저금리시대에는 농가 소득 증대효과가 높지 않다. 오히려 농업예산이 과대평가되는 혼선을 준다. 자금을 이용하는 대상도 담보력이 높은 농가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 정책금융지원은 농가에 대한 다원적 역할의 의무부여도 어렵다. 저금리 지원보다는 신용보증에 의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의 하나이다. 융자지원의 경우에도 전대방식 등 직접지원보다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회계, 농특회계, 다양한 기금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는 예산 관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농업부문은 기금예산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기금은 특정부문에 자금공급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기금이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면서 융자사업 비중을 높이는 단이 있다. 농업발전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쌀 변동직불금지원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에 따라 다른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기금 간 칸막이가 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운용의 통합적 관리를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
지자체 자율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지원체계 도입 필요
”

셋째, 쌀 변동직불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시적 시장 변동을 보완하는 역할은 필요하지만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재정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쌀 변동직불금 지원에 치중하게 되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구조로의 전환, 농업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할 재원확보가 어렵게 된다. 농가가 첨단기술혁신을 수용하여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는 재정운용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중앙집권적 자금지원방식에서 지자체의 자율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지원체계의 도입도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계약하고, 중앙자금을 지원하면서 지역에서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지이용효율화를 위한 농지집단화 지원에서 지역단위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조직에 의한 자금지원 중심에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일 것이다.

사업부문별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여건변화에 적합한 재정운용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업 발전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개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02 재정사업 현안진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현장점검 리포트
전문가 좌담회

02 재정사업 현안진단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에서는 농식품분야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보조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2016년 4분기에 실시했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문가좌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¹⁾

▶ 사업 연혁과 내용

- '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36개 마을을 선정, '05년부터 첫 사업 추진
 -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인근 3~5개마을(법정리, 예시적규모)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 대상
- '10년 시행지침부터 사업명을 일반농산어촌개발로 변경
 - 권역 종합개발, 읍·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 마을정비 및 재개발, 기초인프라 정비, 주민역량 강화 및 소득 향상 기반구축 등으로 사업 다각화
 - '11년 시행지침에서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등으로 세부사업 재편
- '15년 시행지침부터 현행 세부 사업 체계 운영
 -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사업명과 내용을 변경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권역사업과 마을 사업으로 구분되었으며, '04년부터 시행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사업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추진됨.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중심성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거점기능 활성화 중심의 선도지구로, 중심성이 낮은 지역은 기초인프라 중심의 일반지구로 추진(2016년 시행지침)

1)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에서 발간한 2016년 현장브리프 제 2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을 발췌하였다.



-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마을 단위 사업은 권역단위 사업에 비해 대상 지역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종합개발·복지·경제·환경·신규마을 등의 내역 사업으로 추진

-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 마을의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 마련
 -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으로 도로·교통, 상하수도, 재해대비,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휴양 등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가능
 - 지역소득증대 사업으로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의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의 공동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가능
 - 지역경관개선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마을경관, 생태·환경 등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가능
 -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주민 교육·훈련, 마을홍보, 부대비용 지출 등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 등의 추진 가능

[표 1. 일반농산어촌사업 유형별 주요 사업 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선도지구 80억 원 이내, 일반지구 60억 원 이내(국비70%, 지방비 30%) ○사업기간:5년이내 자율 ○농촌 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중심기능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한 배우 지역 서비스 제공 등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비:40억 원이내(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5년이내 자율 ○인근마을을 포함한 종합개발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비:10억 원이내(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5년이내 자율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공동 문화 복지	○사업비:5억 원이내(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5년이내 자율 ○공동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경제 (체협 소득)	○사업비:5억 원이내(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5년이내 자율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 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환경 (경관 생태)	○사업비:5억 원이내(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5년이내 자율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신규 마을	○사업비:3~36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5년이내 자율 ○마을기반조성,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및 마을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시·군 역량	시·군 창의		○사업비:20억 원이내(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5년이내 자율
	역량 강화		○사업비:1.5억 원이내(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1년

자료 : 김영주 외, 2014.12.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재구성)

▶ 사업 예산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예산은 최근 매년 1조 2천억 원 수준을 유지
 - 국고 약 8천 7백억 원, 지방비 약 3천 7백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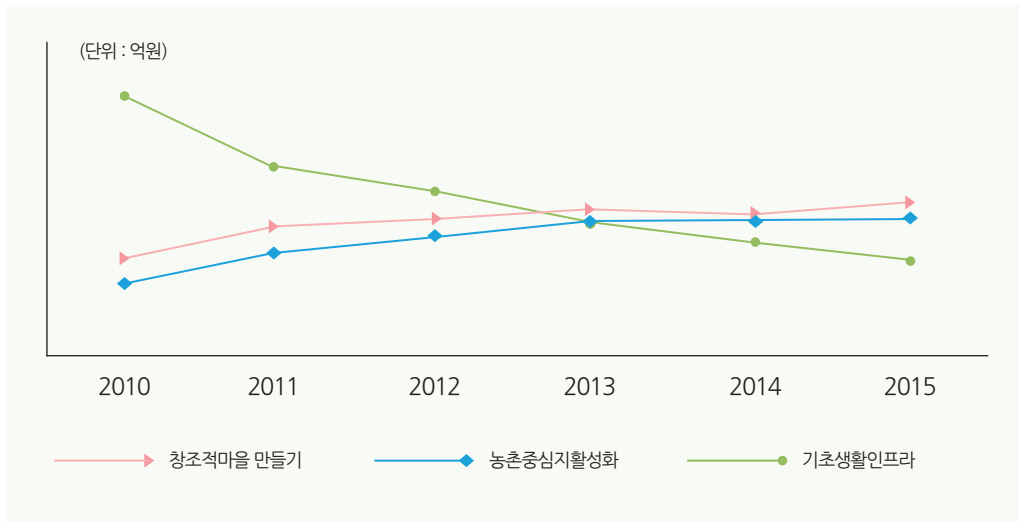
[표 2.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5,362,200	1,246,192	1,247,620	1,246,191
국 고	3,753,540	872,334	873,334	872,334
지방비	1,608,660	373,858	374,286	373,85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 농촌 지역 개발 예산 중 기초생활 인프라의 비중은 줄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 2010년 기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산을 합한 금액이 기초 생활 인프라 예산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5년 기준 앞의 2가지 예산을 합한 금액이 기초 생활 인프라 예산의 3배에 달함.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정부의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함.
 -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보다는 많으나 2010년에 비해 2015년 예산의 차이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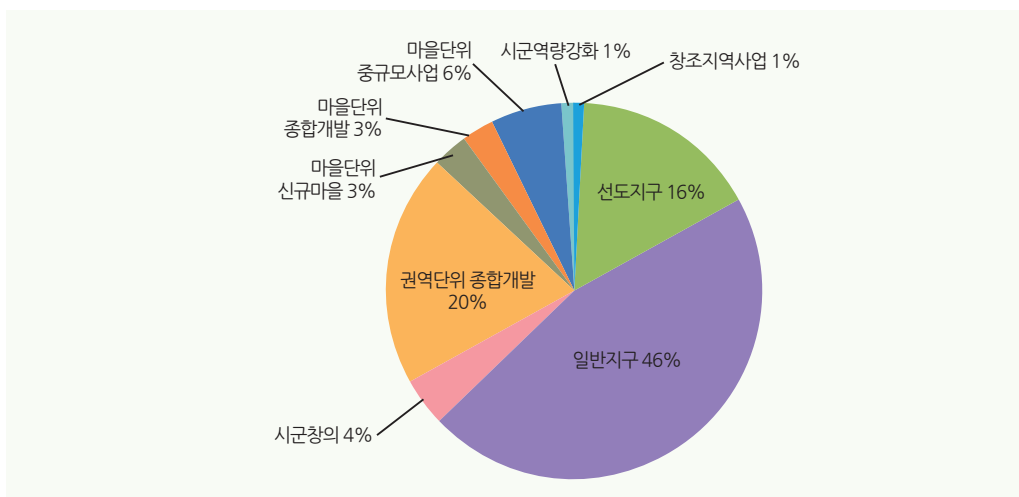
[그림 1. 농촌개발사업 재정 투입 추이]



자료: 농촌지역개발통계(www.raise.go.kr, 2016.10.)

- 신규 사업 측면에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일반지구 사업 예산의 비중 46%, 선도지구 16%,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비중 20%, 마을단위 종합개발과 중규모사업의 비중은 각각 3%, 6%

[그림 2. 일반농산어촌사업 세부사업별 신규 사업 예산 비중]



자료: 농촌지역개발통계(www.raise.go.kr, 2016.10.)

▶ 권역사업 현황

- '14년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21개소,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332개소 등 총 553개 권역 사업이 추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매년 최대 45개 마을을 신규 선정하였으며,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12~'13년 기간 동안 매년 85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사업명과 내용이 바뀌면서 권역 당 보조금 지원 한도는 7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신규 사업 권역 수는 약 2배 증가

[표 3. 농촌마을개발 권역사업 추이]

연도(착수기준)	마을 수 누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2005	36	36	-
2006	56	20	-
2007	96	40	-
2008	136	40	-
2009	176	40	-
2010	221	45	-
2011	309	-	88
2012	395	-	86
2013	480	-	85
2014	553	-	73
계	553	221	332

자료 : 김영주 외, 2014.12.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일반농산어촌개발 현장점검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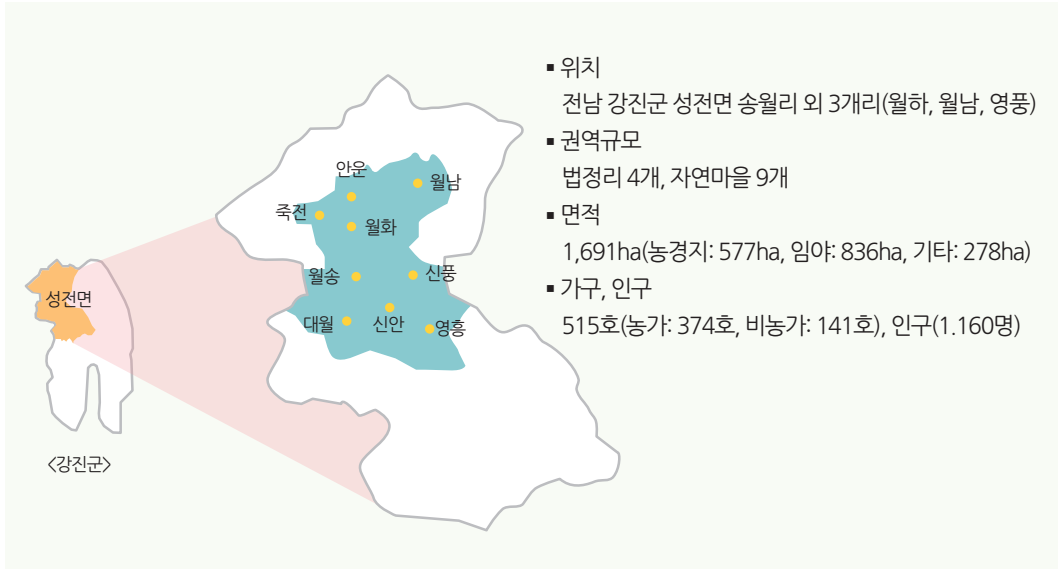


전남 강진 녹향월촌 권역

■ 마을 간 단합과 협력의 대표 사례

전라남도 강진군에 위치한 녹향월촌 권역은 전남지역 내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로 꼽히고 있다. 1,1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9개의 마을은 2006년에 실시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당시 사업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농촌관광사업에 뛰어들었다.

전국 여러 권역들이 권역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농촌마을체험 및 소득사업 등을 운영해왔으나 마을 간의 갈등과 의견 상충의 문제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권역은 비교적 드물었다. 하지만 녹향월촌 권역은 비교적 많은 9개의 마을(월남, 월하, 안운, 죽전, 월송, 대월, 신안, 신평, 영흥)이 단합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소득창출기반을 개발해왔다. 이후 2차 개발사업에 들어가면서 녹향월촌 권역은 2008년 권역 사업 중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권역에 선정되었으며 마을방문객 수는 연 2만 여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2016년에는 농식품부에서 심사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평가에서 4개의 부문(경관, 서비스, 체험, 음식) 모두 1등급으로 평가되어 ' 으뜸촌 '으로도 선정되었다.



■ 권역위원회의 역할과 안정적인 사업운영

녹향월촌 권역이 지금과 같이 단결될 수 있었던 것은 권역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사무장을 주 축으로 각 마을의 이장과 부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월 1~2회 위원회를 소집하여 권역의 주요일정 등을 논의한다.

처음 권역사업을 진행했던 당시에는 대월마을이 권역사업을 주도했었다. 그 후 권역사업이 차츰 진행됨에 따라 권역위원회와 부녀회의 설득으로 다른 마을주민들도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권역위원회에서는 각 마을에 적합한 체험시설과 소득창출시설을 배분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권역발전기금을 통하여 마을별로 균등하게 환원하였다. 기금의 주 재원은 권역사업으로 얻는 수입이다. 마을 별 체험프로그램으로 발생한 수입의 10%를 권역발전기금으로 조성하였고 소득창출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입의 1.3%를 권역 운영비로 마련하였다. 먹거리관련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은 해당 사업에 투자한 128개의 권역소속 가구가 매년 3~5%수준으로 배당된다.

이처럼 녹향월촌 권역은 권역위원회의 적극적인 권역운영과 마을 간의 협의로 권역사업 경영 안정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 마을 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녹향월촌 권역 내의 각 마을은 권역활성화센터의 주관 하에 고유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 별 자연자원에 맞게 체험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어 권역 방문객들은 농촌, 건강, 먹거리,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누릴 수 있다. 먹거리 판매도 병행되고 있으며 권역사업 외 한옥마을 민박과 강진군 그린투어리즘 및 농박체험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마을 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은 마을 내 귀농·귀촌인력들이 적극 참여하여 운영된다. 덕분에 녹향월촌 권역은 마을 간 협력과 연계가 뛰어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다른 권역에서도 녹향월촌 권역의 마을별 체험시설 분산 사례를 견학해 가기도 했다.

[녹향월촌 권역 활성화센터]



[녹향월촌 한우먹거리 체험관]



■ 권역단위 사업 운영

마을 간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표 권역사업으로는 녹향월촌 한우먹거리 체험장이 있다. 체험장은 주로 권역 부녀회에서 운영되며 권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도 판매한다.

체험장 내에서는 식당도 운영하는데 권역 내에 한우농가가 많은 것을 활용하여 한우고기 및 갈비탕 등을 판매하고 있다.

체험장 방문객의 대다수는 권역 내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숙박시설 이용자이다. 단체 방문객들이 많아 체험장 내 식당의 가동률은 높은 편이다.

■ 체험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

녹향월촌 권역의 주요한 고민거리는 체험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다. 주기적으로 방문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방문율이 중요한데 그에 따라 여러 체험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권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중앙에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관리와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육을 통해 권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자들이 우수 프로그램 직접 체험하여 기존의 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하다.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실무자인 사무장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권역 사무장들은 130만 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 받고 있으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입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사무장에 대한 별도의 활동비지원과 체험프로그램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사업시행 시 단계별 지원 및 평가 필요

다음으로는 권역사업시행 단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권역사업은 2단계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된다. 권역사업 특성 상 20억 원 가량 거액의 예산이 한 번에 집행되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녹향월촌 권역의 경우 1단계 사업진행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대월마을에 자연스럽게 사업시설이 집중되었다. 그 후 2단계 사업에 들어서면서 나머지 마을에도 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기존 계획과의 괴리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1단계 계획에 의해 건립된 권역활성화센터의 설계가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몇몇 권역에서는 사업초기에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었으나 사업 중반부 이후 주민 간 갈등 문제와 역량부족으로 권역사업이 실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 2단계 사업진행방식을 다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매 단계별로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권역사업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단계별 평가 시에도 사업수혜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권역사업을 통한 마을 간 협력 확산 기대

일반농산어촌개발 권역사업은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는 전국 332개소의 권역에서 권역단위 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권역개발

사업의 주요 취지는 권역 내 마을 간의 협력과 화합이었으나 일부권역에서는 사업진행과 경영차원에서 마을 간 의견 상충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녹향월촌 권역도 사업시작 당시에는 한 마을의 주도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권역위원회와 부녀회의 역할로 9개의 마을의 화합을 이끌어 성공적인 권역사업의 사례로 꼽힐 수 있었다.

현재 마을 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권역과 이제 신규로 권역개발사업에 지원 할 권역 모두 녹향월촌 권역의 사례를 본받아 권역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되길 바란다.



충남 청양 알프스 마을

■ 지역 주민이 잘 살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청양 알프스 마을

칠갑산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과 잔잔한 아름다움을 지닌 천장호수에 둘러싸인 천장리는 칠갑산 권역에 포함되면서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국제화 농촌을 꿈꾸는 천장리, 알프스마을을 가보았다.

■ 농업기반이 취약한 산골오지마을의 변신

본래 천장리는 머무는 이도 찾아오는 이도 드문, 특색 없는 산골오지마을이었다. 농촌마을이지만 농업기반도 취약한 편인지라 주민들 소득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계기로 얼음분수축제, 세계조롱박축제 등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을로 변모하였다. 산골오지마을이 대표적인 축제마을로 거듭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 순탄치 않았던 성공의 여정

지난 12년,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권역 내 마을간 사업비 분배와 건물 부지 선정에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비 집행부터 난관을 겪었다. 결국 사업 첫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바람에 2006년 중간평가에서 패널티를 받기도 하였다. 마을간 대립만이 아니다. 사업이란 개념 자체가 낯선 농촌마을이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 불신이 깊어졌고, 기업유치를 위해 추진한 축구장 건립으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진정서가 난무하고 고소·고발사건도 발생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축구장이 완공되고, 대표가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는 등 홍보에 힘써 알프스 마을 인지도를 높여 갔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계 관리시스템이 정립되고, 조직도 체계화 되다보니 경영도 안정되면서 갈등은 완화되었다.

■ 발상의 전환, 보유자원을 활용한 축제의 성공

알프스 마을은 농촌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성이 취약해 3차 산업 개발이 절실하였다. 그러나 산경사가 심한 칠갑산 밑에 위치하여, 골바람이 매섭고 해도 잘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6차 산업화에 좋지 않은 조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열악한 것으로 간주된 자원을 상품화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을 이뤄냈다. 여기에 농촌의 “농촌다움”을 강조하여 도시민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2008년 시작한 ‘얼음분수축제’는 마을 자원을 십분 발휘한 대표 성과물이다. 칠갑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음지 지형은 얼음분수축제장으로, 경사진 산은 눈썰매장으로 제격이었다. 또한 옆에 흐르는 하천은 빙어 낚시터로, 겨울철 놀리고 있는 마을 논·밭은 얼음 썰매장과 주차장으로 변모하여 축제에 활용되었다. 결국 연간 30만 명이 찾는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

[빙어낚시]



[얼음분수축제]



■ 4계절 색이 다른 축제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

얼음분수축제에 더해 알프스 마을에는 계절마다 색이 다른 축제들로 방문객을 맞이 한다. 겨울철 얼음분수가 새하얗게 펼쳐진 그 공간에, 여름에는 수 십 만개의 조롱박이 장관을 이룬다. 가을에는 지역의 특산물인 공을 활용한 축제가 열리는데 공알새춤, 도리깨질, 공 타작 등 도시인들에게 낯선 농촌전통체험을 즐길 수 있다. 봄철에는 박을 활용한 뷰티축제를 기획 중에 있다.

■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조직구조

쉬지 않고 돌아가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축제들의 기획과 운영은 오롯이 마을주민의 몫이다. 마을 운영위원회,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어린이회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 조직은 축제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참여율은 무려 75% 이상에 달한다. 겨울철 소일거리로 여겼던 마을 주민들이 특정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숙련도가 높아졌고, 이제는 나름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우동만들기]



[고구마 굽기]



■ 투명하고 정립화된 회계 관리로 경영 전문성을 갖춘 사업체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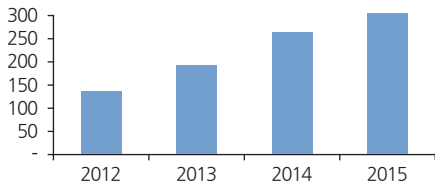
사업초반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깨끗한 회계 관리가 필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이에 기존의 단식부기를 복식부기화하고 매년 12월에 익년도 사업수지예산서를 결의하고 있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발간하며 투명한 회계 관리를 정립하니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었고 자연히 경영의 전문성도 습득되었다. 이들 회계 관련 업무는 2011년에 귀농한 마을주민이 맡고 있다고 한다.

■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마을 전체가 주인 의식을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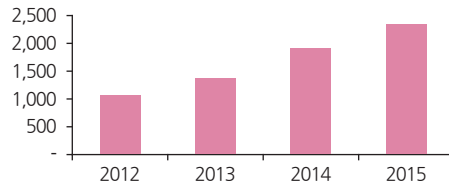
농촌마을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에 낯설지만 알프스 마을 주민들은 매년 3~4회 열리는 총회에 나가 의사를 피력한다. 물론 사업초반 알프스 마을도 의사결정에 애로사항은 있었다. 의사 결정보다는 생업이 더 중요했던 주민들의 총회 참석률이 낮았고, 참석하지 않은 주민들이 결정에 반발하기도 하였다. 결국 참석률 제고를 위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주민들의 참석률을 높였다. 회의 5일전 마을 전체에 안건과 결의사항이 작성된 회의 자료를 전달하여 사전에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부터는 의사봉도 도입하였다. 전자회의록을 접수하고 회의록 녹취와 사진을 기록하는 등 이제는 대기업 총회를 방불케 한다.



방문객



매출액



■ 마을주인의 농업·농외소득 향상으로 “잘사는 마을” 목표를 현실로

이러한 노력으로 알프스마을의 방문객 및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방문객은 12만 명에서 2015년 29만 명으로 약 17만 명이 증가하였고, 동기간 매출액은 9억 4,600만 원에서 2015년 22억 2,300만 원으로 2.3배 이상 증가하였다.

마을의 가구당 농업소득은 사업초기인 2009년 540만 원에서 2014년 1,621만 원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마을주인의 농외소득 향상이다. 마을 가구당 농외소득은 100만 원에서 2,110만원으로 약 21배 가량 증가하면서 농업소득을 크게 앞서고 있다. 농업기반이 약했던 마을의 농외소득의 향상은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보여준다.

■ 일자리가 창출되니 고령의 산골오지마을에 활력의 바람이

알프스마을의 유급근로자는 2012년 12명에서 2016년 24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축제 등 행사에 고용되는 일용직은 2,681명에서 2015년 6,60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마을주민 102명 중 49세 이하가 36명(35.3%)으로 일반적인 농촌지역과 비교해



젊은 연령층의 높은 비중이 눈에 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에 사람이 모이니 농촌마을에도 활기가 도는 기분이다.

■ 투자를 통한 수익구조의 다각화

알프스 마을에는 그동안 24억 2천만 원의 수익금 재투자가 있었다. 앞으로도 축제와 각종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시설재투자는 방문객 재방문과 이들을 통한 홍보의 계기가 되고 당일형 방문객을 체류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경험에서다. 그 결과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머물거리 등으로 구조화하며 축제장과 체험장, 식당, 펜션, 농산물판매장, 레저시설 등 수익 구조의 확대와 다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사만 알던 농촌마을에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한평생 농사를 짓던 분들이기에 선행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선행 사업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사업 위주로 추진되기 쉽다.

그러나 장기적인 농촌지역의 자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지사업보다는 소득사업 위주로 진행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행정적인 부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전문가 좌담회

좌 장 : 국승용(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

토론자 :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유정규(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오형은(지역활성화센터 대표)

한상열(화천 토고미마을 위원장)

양주필(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국승용 센터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그 취지가 매우 좋고, 우리 농산어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란 생각이 든다. 현장에 가 보면, 취지대로 훌륭한 성과를 낸 곳도 있고,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우려되는 사업장도 있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이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의 성과, 문제점, 발전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전환된 배경과 이 사업들의 성과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 종합적·상향식 사업... 농촌 인구·소득 증가 등 성과



김정섭 센터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역 사업 중에 굵직한 사업들은 사업기한이 대체로 5년이다. 지금은 소득을 만들기도, 건물을 완공하기도 이른 시점인 경우가 많다. 성과를 평가하려면 2012년 이전에 종료된 사업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2004년부터 시행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02년부터 시행한 2억 원 규모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등이 유사한 사업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업 추진방식이나 콘텐츠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는 ‘종합’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다리를 놓거나 유리 온실을 만들 때, 각각 다른 예산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이 사업 이후부터는 하나의 사업 예산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상향식 주민 참여방식으로 틀이 바뀐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할 일을 관청이 정해주었는데, 이 사업이 도입되면서부터는 주민들이 70억 원 짜리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유정규 단장

사업이 기존의 마을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확대된 배경에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인근의 마을 자원과 연계해서 사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존 마을 단위 사업을 통해 형성된 각종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권역 사업의 성과로는 첫째, 주민주도 상향식 방식을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둘째, 마을의 생활환경이나 기초 생활인프라를 보완함으로써 동네 주민의 편의를 증대시켰다. 셋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도농교류 기관 시설이 구축되고, 방문객뿐만 아니라, 사무장, 귀농·귀촌인 등 외부 인력이 유입되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양주필 과장

권역 단위 사업은 기초 생활시설 및 소득시설 건립과 권역의 특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권역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 주민의 행복한 삶터와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자원이 보존된 농촌 문화권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세부적인 성과로는 첫째, 농촌 주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됐다. 주민 삶의 질 만족도가 2012년도 5점 만점의 2.7점에서 2015년도에 10점 만점의 5.8점으로 조금 올랐다. 둘째, 마을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2015년 9월까지 약 580개 시설이 완공되었는데, 한 시설에서 평균 약 1억 5,000만~6,000만 원 정도 수입을 내고 있다. 셋째,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 약 7,0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권역 단위 사업은 읍면 인구감소 완화, 귀농(귀촌) 가구 수 증가 등 공동체 유지 기능 증진에도 기여했다.

비록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축적할 수 있었다. 협업단체, 소득법인 등도 700개소에서 1,000여 개소 정도 생겨났으며, 마을의 리더들과 현장포럼도 많아졌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고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구축되기도 하였다.



한상열 위원장

권역 사업의 주요 성과는 마을의 귀농·귀촌 인구와 마을 소득이 늘었다는 것이다. 타 지방은 쌀 80kg당 14만 원 정도 받는데 비해 우리 신대리 마을은 유기농 쌀을 재배해서 24만 원 정도 받는다.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인 편이며 소득이 높은 농가에서는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일을 물려받으러 오기도 한다. 쌀농사뿐만 아니라 축산업, 시설원예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온 분들은 농촌 정서를 알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한다.

마을 간의 협력으로 다 같이 소득을 높이자는 권역 사업의 취지 자체도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 마을이 협력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 마을의 경우에는 권역 사업 덕택에 없었던 계곡 자연자원을 권역 내 이웃 마을과 공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 마을만 소득사업이 잘 된다고 여기게 되면, 다른 마을들이 협조를 잘 안 해주는 문제도 있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실제로 이런 사업 덕분에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기초 생활인프라 구축 등 여러 사업을 하면서 주변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



오형은 대표

마을에서 각자 목적인 바에 따라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어떤 마을에서는 관광 사업을 하고, 다른 마을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서는 기존 농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고미 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토고미마을의 경우 처음부터 쌀을 적정 가격으로 잘 팔고 기존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회원을 많이 확보해서 판매량을 늘리기보다는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단골을 통해 기존의 농업을 유지하려 했다. 서비스 차원에서는 그런 고객들과 활발하게 도농교류를 실천하고 싶어 했다. 각자의 노력에 따라 관광객이 늘고, 새로운 사업이나 일자리가 생기고, 자신들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적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기반 등을 만들 수 있었다.

● 권역 단위 사업에 대한 세심한 고려 필요

국승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권역 단위 사업의 한계를 주제로 이야기했으면 한다.

김정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권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마을 두세 개를 합친 권역단위라는 개념은 농촌 마을 사람들의 사회적 정체성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하는 권역들도 권역 안의 세 개 마을 중 두 마을은 사업이 안 되고 나머지 한 마을만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다.

유정규

한 마을의 성과가 권역 전체의 성과로 희석될 수 있다. 토고미 권역 내 신대리 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단합으로 새농촌건설운동,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도농교류와 친환경농업을 빠르게 도입해왔다. 현재의 토고미 권역 사업도 신대리 마을 지도자와 지자체 공무원이 협력해 여러 정책 사업을 유치해 가면서 신대리 마을의 사업이 권역사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토고미권역의 성과를 그 권역사업 그 자체의 성과라고만 한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은 신대리 마을의 성과가 마치 토고미 권역의 성과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 신대리 마을은 오히려 다른 마을들과 권역으로 묶이지 않고, 마을 단독사업을 했다면 더 큰 성과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한상열

농촌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위해서는 품삯도 안 받고 일한다. 이런 농촌 정서 때문에 마을 단위 사업들이 성공해왔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 개발 권역사업)에서는 이런 농촌 정서와 상관없는 권역 단위로 사업을 한다. 그래서 권역사업을 통해 마을끼리 협력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소득사업의 경우, 금전적인 요인이 강하니 마을 간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기반 시설 구축 등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굳이 권역사업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권역사업이 잘된다는 지역도 내부에서는 주민 간의 갈등 문제가 있다. 마을 단위의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로 묶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이러한 문제점은 꼭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형은

권역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는 권역을 설정하기 위해 함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정의해야 했다.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수계가 연결되어 있어 영농활동을 같이하는 곳에 공동체적 유대감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학군과 수계를 중심으로 권역을 묶어서 공동체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이 초기 권역 사업의 모델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학교에 다녀도 같은 생활공동체라 할 수가 없었다. 영농활동도 이미 개별화되어 있어서 같은 수계의 물을 쓴다고 해도 같은 영농권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권역 단위의 다른 한계점은 상향식 주민참여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사실 마을 단위 사업에서 상향식 방식이 훨씬 잘 진행되었다. 마을 단위



사업 때는 마을 이장, 청년회장, 새마을 위원장, 부녀회장, 마을 주민들이 와서 같이 논의했다. 그런데 권역 사업 때는 각 마을 이장들만 모여 논의하게 된다.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권역 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다. 마을끼리의 협력은 인접한 마을이 권역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마을들이 서로 필요를 느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지원 도입과 기존 권역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국승용

지금부터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기존 사업들의 성과를 논의해봤으면 한다. 언론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왜 농촌 개발 사업들에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성과가 없는가?'이다. 아무래도 역량 있는 주체들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을 것 같다.

유정규

기존 농촌개발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지역 선정 방식 자체가 성공가능성을 줄여가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처음에는 80점 이상 학생들에게 우등생을 줬는데, 어느 시점부터 80점 이상인 학생들은 모두 상을 줬기 이제는 할 수 없이 75점짜리 학생에게도 우등상을 주게 되는 것과 같다. 사업 초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지만, 사업이 계속 시행되면서 점점 열악한 조건의 마을까지 대상지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출발부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었다. 그 동안은 75점짜리를 80점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역량단계별지원방식'을 도입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역량 강화'를 필수조건으로 한 것이다. 결과는 두고봐야겠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정책사업의 총량이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농촌 마을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도

포함한다. 애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 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1,000개 권역에 권역 당 70억 원씩, 총 7조 원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가 전체 공급량에 미치지 못하자 사업 기간이 2017년까지로 연장되었다. 지역의 수용능력을 초과한 사업이 공급되면서 시설의 유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예산 낭비 등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은 농촌마을종합개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행정 주도의 중앙행정이 주도하는 하향식 성격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졌다는 것은 곧 사업의 성공이나 지속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주필

지역개발 사업의 주기적인 개편으로 사업 지원 금액은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역량단계별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지역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다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득 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이다. 2015년 이후로는 소득·체험시설 관련해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20%를 자부담 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87개, 2015년에는 45개 정도였던 사업량이 이러한 조건들이 생기면서 2016년에는 19개, 올해 2017년에는 6개 사업으로 대폭 줄었다. 비슷한 경우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같은 마을 단위 사업에서도 소득·체험시설에 대한 자부담 조건이 생기면서 사업량이 현저히 줄었다. 역량단계별 지원과 소득·체험시설에 대한 자부담 조건을 고려하면 과거의 권역 사업과 현재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따로 구분되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유정규

사업대상의 선정 절차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을이든 권역이든 먼저 예비 신청을 받고 선행적으로 일정한 교육이나 연수과정을 거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권역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 지역주민과 실질적인 추진주체(가령, Local Action Group)가 함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다시 2차 평가를 하여 나머지 사업비를



지원하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이런 방식으로의 개편은 여러 가지 행정적 비용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많이 개선될 것이다.

한상열

권역 사업 지원 시 현재 신규 지역 위주의 지원 외에도 기존 우수한 성과를 냈던 지역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유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미 우수한 지역들은 사업을 완료한 상태라 더 이상 지원할 마음이 없는데 할당된 예산은 써야 해서 골치가 아프다. 따라서 기존 우수 지역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발전의 여세를 이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가공·판매 쪽에서는 최근 규제가 더 강화되어 어려움이 많다. 마을에서 식품을 만들 때도 일반 대기업과 똑같이 인증 받아야 한다. 가공품을 만들거나 팔려면 제조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런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농산물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마을 소득 올리기가 어렵다.

양주필

기존 지역 추가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는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식적인 수치를 보면 현재까지 전체 마을의 10% 정도만 지원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90%에서 신규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에서는 성과가 좋지 못했던 마을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소액 사업 등 유사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 하려고 한다. 기존에 사업을 시행했던 마을이라도 인증비용, 컨설팅, 마케팅 등과 관련해서는 농촌산업과나 농업과 관련된 식량국, 유통국, 축산국 등의 사업을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지역개발사업과 농업 부분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어촌공사 주도의 사업 개선... 일본·유럽 등의 지역개발 방식 벤치마킹 필요

국승용

앞서 여러분들이 상향식 방식의 도입과 확산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아주셨는데, 현장에서는 이 상향식 참여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상향식 방식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김정섭

‘상향식 주민참여 방식’의 도입과 확산이 권역 사업의 성과였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형식상의 변화이지 실질적인 변화라고는 보기 어렵다. 지역개발의 목적은 동네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다. 그런데 정작 사업이 끝난 곳에 가보면 빵틀로 찍어낸 듯 비슷한 사업 결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마다 2층~3층짜리 허름한 유스호스텔 수준의 건물을 지어 놨다. 그것도 10개가 있으면 7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사업 서류상으로는 회의록과 위원회 활동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상향식이지만 실제로는 사업방식이 상향적이지 않았다는 증거다.

현재 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이다. 사업지침상으로는 한국 농어촌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실시설계와 시공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촌마을 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평가 부분 등 사업 전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유정규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모두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대표 유형을 제시한다. 사업 초창기 때는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담당자들은 그 사업들이 사업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의 대표 유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예시나 사례, 유형을 제시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한 번에 몇 백 명씩 모아놓고 사업 지침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업지침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몇몇 창의적으로 사업을 하는 마을에 가면 메뉴에 없는 사업을 많이 한다. 하지만 다수의 마을은 대표 메뉴로 사업을 하는 실정이다.

한상열

지금의 행정구조에서는 상향식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상향식으로 하려면, 우선 주민들이 제안하여 사업비를 받아야 한다. 사업비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군청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 담당자는 다시 워선에 물어봐야 한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사업을 해본 적도, 운영해 본 적도 없다. 사업진행 절차가 까다롭고 사업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다. 게다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까지 져야 한다. 성공한 마을들의 뒷 배경에는 지자체 담당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지자체에서 사업진행에 대한 행정지원이 힘들다면 중앙에서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정규

지금 권역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지만, 승인권자는 도지사다. 그러다 보니 시군에서 계획을 제안해도 도의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사업을 이관하지 말고, 지방에 직접 지사(예: 일본의 지방행정국)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방식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화하고, 지자체는 자치 농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유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권역 사업 추진방식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가도 하는 구조이다. 즉 시험을 본 사람이 스스로 채점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양주필

상향식 방식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비슷한 사업이 양산된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첫째,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를 수 있다. 둘째, 지역 사업에 대한 사업성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입장에서는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사업 역량 자체를 잘 모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키워주는 중간조직, 컨설팅회사, 공무원조직, 농어촌공사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도 누군가는 객관적으로 ‘이 마을은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이 적합하지 않으니 소득사업 대신 기초 생활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게 어떨겠냐.’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유정규

지금까지의 ‘농촌 마을 주민들을 교육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여건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것이라고 잘 못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이 2000년대 초, 90점짜리 마을이 많았을 땐 어느 정도 가능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여건이 변했다. 사업의 추진주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항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제는 마을이 고령화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의 LEADER(Liaison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Rurale)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른바 한국형 LEADER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것이다. 주민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민들과 함께 일할 활동주체(Local Action Group; 이하 ‘LAG’)를 묶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오형은

영국에서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개선하려고 이탈리아 협동조합 사례를 적용했다. 그런데 가난한 동네, 빈민가에서는 이 모델이 적용이 잘

안 되었다고 한다. 원인은 협업이나 협력 경험이 전혀 없는 마을에는 공동의 문제를 논의해서 같이 결정해 본 경험이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에 있었다. 반면 중산층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는 이 모델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주민들이 서로 고민하고 의제 내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빈민층이 사는 곳은 기업방식이 아닌 사회적 기업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마을 자체가 자신의 수요나 역량을 잘 모를 경우에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수요를 찾도록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가서 도와주는 방식이나 공공기금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 반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곳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그럴 역량이 있는 단체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한다.

● 농촌 중심지 육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강화, 유연한 사업 추진 필요

국승용

토론의 마지막 주제는 ‘중심지 육성 사업’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중심지 육성 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김정섭

중심지 육성 사업은 보통 면소재지나 쇠퇴해가는 읍소재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전개되는데, 면 안에서도 편차가 크다. 전국 면 평균 인구가 4천 명인데, 2천 명이 안 되는 면도 있다. 물론 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내부 과정이 있겠지만 선정 과정에 좀 더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본다. 과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차선 왕복 도로, 보도블록, 상가 간판 바꾸기 등,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들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마을 주민들의 구매력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도블록, 간판 바꾼다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물건 살 사람이 두 번 사러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목적은 공공적 서비스, 준공공적 서비스, 장기적으로는 상업적 서비스를 활발히 공급하는 데에 있다. 물리적 인프라를 깔고, 건물을 개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설보다는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중심지 개발사업 내에서 서비스 공급을 위한 경상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양주필

중심지 사업의 결과라고 흔히 언급되는 것은 옛날 읍면소재지정비사업 결과이고, 현행 중심지 사업은 다르게 봐야 한다. 예전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 사업이고, 2015년부터 현행 중심지 개념이 도입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섞어서 하고 있다. 2015년~2017년 동안 선도 지구 51개, 일반 지구 220개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한 지구당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다.

오형은

중심지 사업 현장에서 보면 계획에 투입되는 인력은 많은데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

실행성이 높은 계획이 만들어지려면 움직일 조직과 사람을 찾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은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이 현장에서 사업에 참여 할 사람들과 논의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 유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결과에 대한 부담과 좀 더 좋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현장에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한다. 계획 세우고 평가하느라 정작 현장에서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곳도 있다.

유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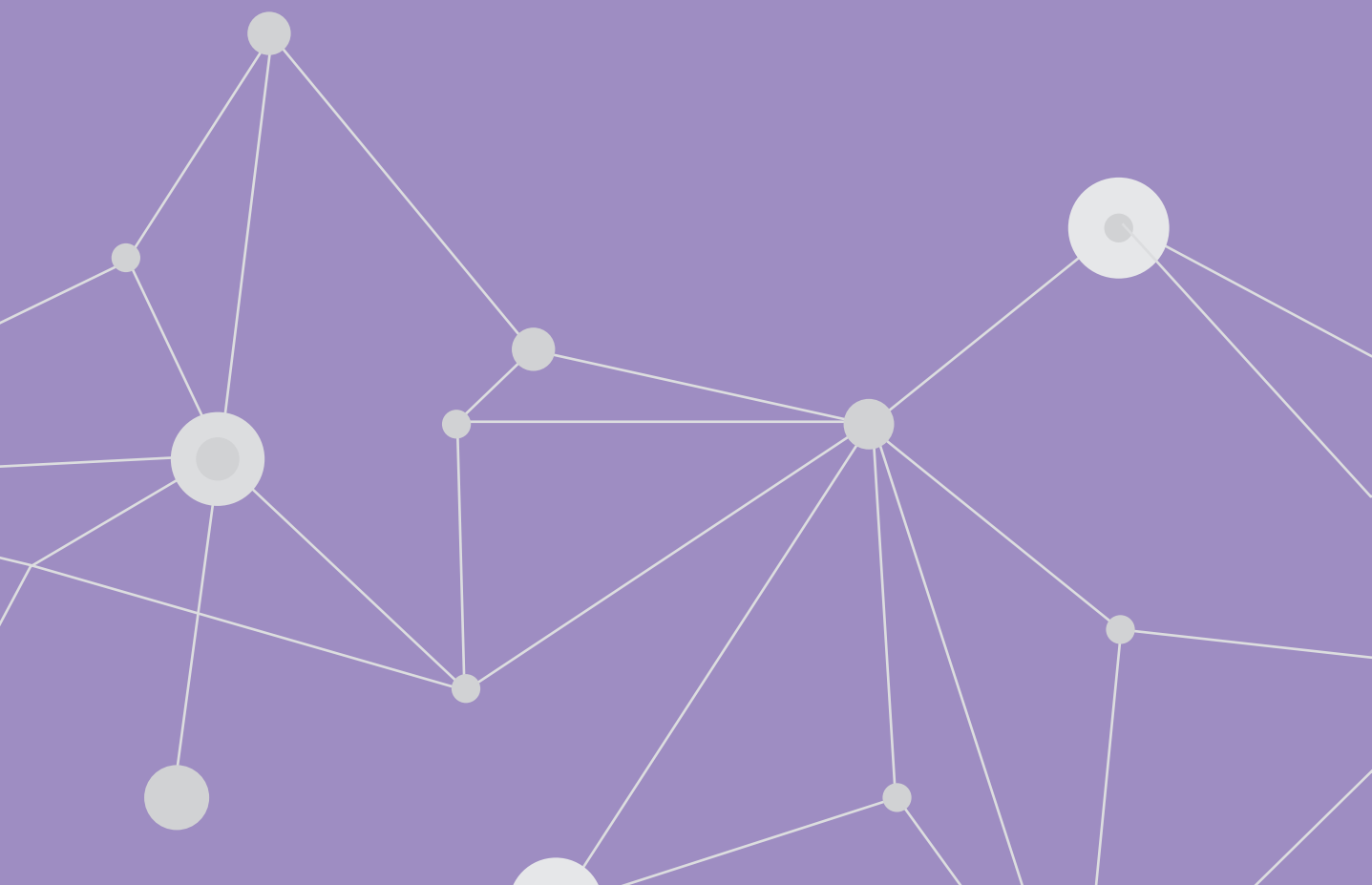
중심지 사업을 통해 형성된 각종 하드웨어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중심지 사업이 오히려 마을사업의 부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번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만든 면소재지정비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미 고령화·과소화되어 빈집이 많은 지역인데도 면소재지 정비를 명목으로 사업지역 내 논밭을 매입하고, 기존의



주택을 헐어서 바둑판처럼 도로를 정비하게 되어 있었다. 만일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사용할 사람이 없을 지도 모르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 사업이 계속 된다면, 중심지 사업의 확대는 결국 부실의 규모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사업지나 사업내용에 따라 운영주체를 다르게 하는 등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중심의 공공적 성격은 그 운영주체를 아예 행정으로 하고, 소득증대나 역량강화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나 사람에게 맡기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직운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하면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국승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예산 규모도 크고, 다수의 농촌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오늘 논의한 내용이 이 사업이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03 거시경제 동향

경제성장
생산 및 소비
고용
금리
물가
환율
수출입

요약

- 2016년 하반기 경제는 내수성장의 정체와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률을 보였음.
- 부문별 산업 측면에서는 조선업 및 해운 업계의 구조조정의 여파가 있었으나 건설 분야의 높은 성장세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 물가는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생산자물가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와 미국 달러화의 강세로 인한 원재료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했음.
- 소비자물가지수는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분 소비는 위축됨.
 - 소매판매액 지수의 증가세는 축소되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국내정치적불안정 등으로 하락함.
- 고용은 산업 구조조정 여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음.
 - 50대 이상 연령의 취업자 증가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에 치솟았던 20대 청년 실업률도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됨.
- 국내경제의 불황지속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 달러화의 강세 상황에서 국내 산업 구조조정문제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1.25%의 기준금리 수준이 유지됨.
- 미국대선과 미국연방은행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미국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함.
-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세로 수출과 수입의 증가세가 줄어든 가운데 불황형 흑자가 지속됨.

03 거시경제 동향

● 경제성장

- 2016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내수 정체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평균 2.5%의 낮은 수치를 기록함.
 - 3/4분기 성장률은 2.6%, 4/4분기는 2.3%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2%p, -0.8%p 하락함.
- 농림어업계열 경제성장률은 청탁금지법 시행,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2016년 하반기 평균 -4.7%로 나타났다.
 - 분기별 성장률은 3/4분기 -4.6%, 4/4분기 -4.8%임.
-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에서는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3.4%수준을 유지하며 성장률이 정체 되고 있으며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함.
 - 내수부문에서는 소비활성화 정책효과로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세가 약화되었으며 수출부진 및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설비투자 규모가 축소됨.
 - 건설투자는 1.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총자본형성의 성장에 크게 기여함.
 - 수출부문은 세계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증가율이 낮았음.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전년동기대비 %p

	2015 ^{p)}				2016 ^{p)}			
	1/4	2/4	3/4	4/4	1/4	2/4	3/4	4/4
최종소비지출	1.3	1.3	1.5	2.2	1.8	2.1	1.9	1.3
민간	0.8	0.8	1.1	1.6	1.1	1.6	1.3	0.8
총자본형성	1.6	1.7	2.1	2.4	1.0	1.8	1.5	1.8
건설투자	0.1	0.2	0.9	1.1	1.2	1.7	1.7	1.8
설비투자	0.5	0.4	0.6	0.3	-0.4	-0.2	-0.4	0.1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0.1	0.1	0.1	0.1	0.1	0.2	0.2	0.2
재고증감	0.9	1.1	0.7	0.8	0.2	0.2	0.0	-0.3
내수(재고증감 제외)	2.0	1.9	2.9	3.8	2.6	3.7	3.4	3.4
순수출	-0.6	-1	-1.1	-1.4	-0.2	-0.6	-0.7	-0.6
총수출	0.2	-0.3	0.3	1.3	0.3	0.8	1.3	0.2
총수입	0.8	0.7	1.4	2.7	0.5	1.4	2.0	0.8
국내총생산	2.4	2.2	2.8	3.1	2.8	3.3	2.6	2.3

주 : p)는 잠정치로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 생산 및 소비

- 전산업생산지수 등락률은 전년동기대비 하반기 평균 3.3%이며 작년의 증가세에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건설업의 2016년 하반기 상황은 저금리 기조 하에 민간주택건설의 증가와 공공 SOC 집행 확대로 평균성장률은 17.7%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였음.
 - 광공업의 성장률은 상반기 비교하여 소폭 상승하였으나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 여파와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평균 1.6%수치를 기록했음.
 - 서비스업부분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의 보건의 축소와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확대로 하반기 평균 2.9% 증가함.
 - 공공행정은 2016년 하반기 추경실시로 4/4분기 2.2% 증가세를 보였음.

[생산지수 등락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p)}
전산업생산지수	1.0	1.1	2.2	2.7	2.3	3.6	3.2	3.4
광공업	-0.9	-1.3	0.0	0.3	-0.2	1.0	0.6	2.7
건설업	-2.0	-3.8	6.1	8.1	15.1	19.2	17.1	18.3
서비스업	2.8	2.9	3.0	3.5	2.8	3.7	3.6	2.1
공공행정	0.3	3.3	2.7	3.7	0.3	2.3	0.5	2.2

주: p)는 잠정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 2016년 하반기 평균 최종소비지출은 전반기 대비 -0.5%p하락한 2.5%를 기록함.
 - 정부의 소비 증가율은 하반기 평균 3.7%로 높은 수치를 이어갔으나 민간부분의 소비는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
 - 특히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 등이 종료되면서 가계부분의 소비는 3/4, 4/4분기 각각 2.7%, 1.6%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둔화됨.

[소비 등락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5 ^{p)}				2016 ^{p)}			
	1/4	2/4	3/4	4/4	1/4	2/4	3/4	4/4
최종소비지출	2.0	2.1	2.3	3.3	2.7	3.4	3.0	2.0
민간	1.6	1.7	2.1	3.0	2.2	3.3	2.7	1.6
가계	1.7	1.8	2.2	3.2	2.2	3.3	2.8	1.6
가계에봉사하는 비영리단체	0.5	0.0	-0.5	-1.6	1.7	3.7	1.9	1.8
정부	3.4	3.5	3.2	4.2	4.5	3.6	4.0	3.4

주 : p)는 잠정치율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 2016년 하반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3% 상승, 전반기 대비 2.4%p 감소하였음.
 - 내구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해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됨.
 - 4/4분기에는 국내 정치적불안정과 경제비관전망 등으로 소비가 축소되어 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액 지수가 각각 -0.3%, 0.9%로 크게 하락함.

[소매판매액 지수 등락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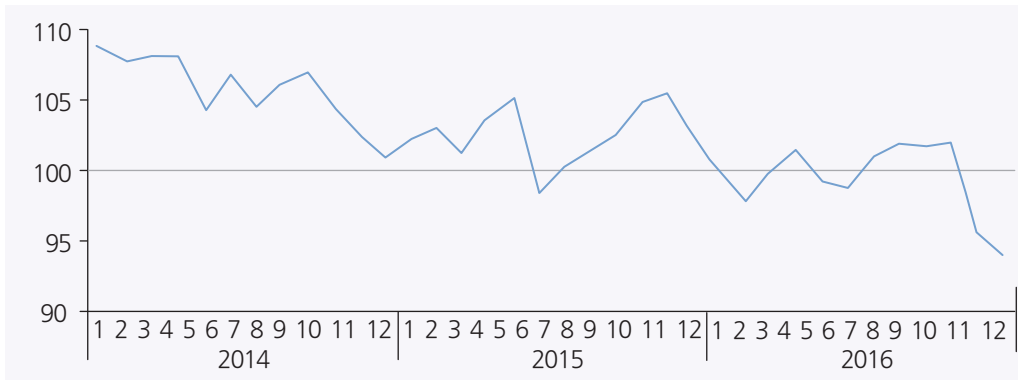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p)}
소매판매액지수	2.2	3.4	3.6	6.1	4.6	6.2	3.6	2.4
내구재	7.9	8.9	7.7	16.1	5.6	11.1	1.3	-0.3
준내구재	-2.2	-1.3	-3.4	1.5	2.7	4.6	3.8	0.9
비내구재	0.8	2.4	4.0	3.0	4.9	4.2	4.9	4.8
음식료품	1.6	3.0	4.6	2.9	2.8	2.7	3.9	4.1

주 : p)는 잠정치율 의미함.

자료: 통계청

-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 10월까지 회복세를 보이다 국내 정치적불안정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크게 하락함.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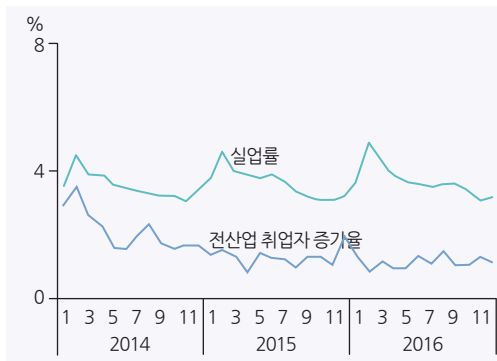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고용

- 2016년 하반기 고용은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 유지하고 있음.
 - 2106년 하반기 전체 산업 취업자 증가율은 전반기와 유사한 전년동월대비 평균 1.2%를 기록했음.
 - '15년 메르스 기저효과로 서비스업부문의 취업자가 확대되었으나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의 여파와 수출부진의 지속으로 제조업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었음.
- 전연령 실업률은 하반기 평균 3.4%로 전반기와 비교하여 소폭 하락하였으나 3%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대의 청년실업률은 완만하게 하락하여 하반기 평균 8.9%였으며 상반기 대비 1.87%p 하락했음.
- 연령별 취업자 변화에서는 50대 및 60대 이상 연령의 취업자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하반기 60세 이상 연령의 전년동기대비 평균 고용 증가율은 6.9%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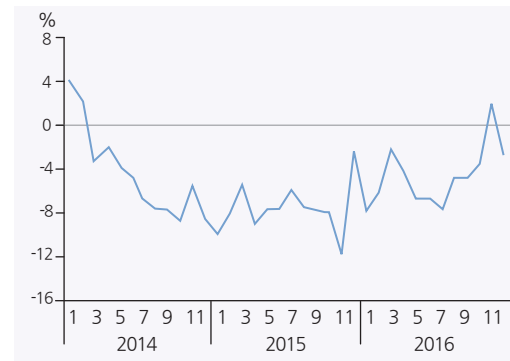
- 농림어업계열 취업자 수는 완만한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2016년 하반기 전년동월대비 평균 증감율은 -3.2%이며 상반기대비 2.2%p 증가한 수치임.
 - 전산업대비 농림어업취업자 비중역시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6년 하반기에는 5.1%로 나타났음.

[실업률 및 취업자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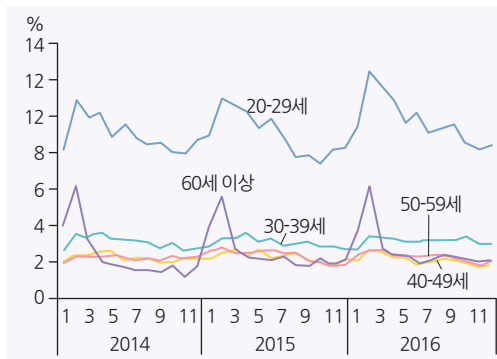
주: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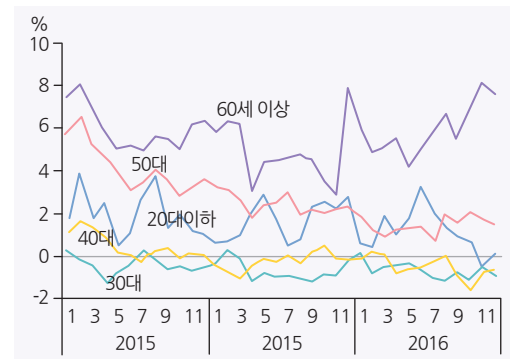
주: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통계청

[연령별 실업률]



자료: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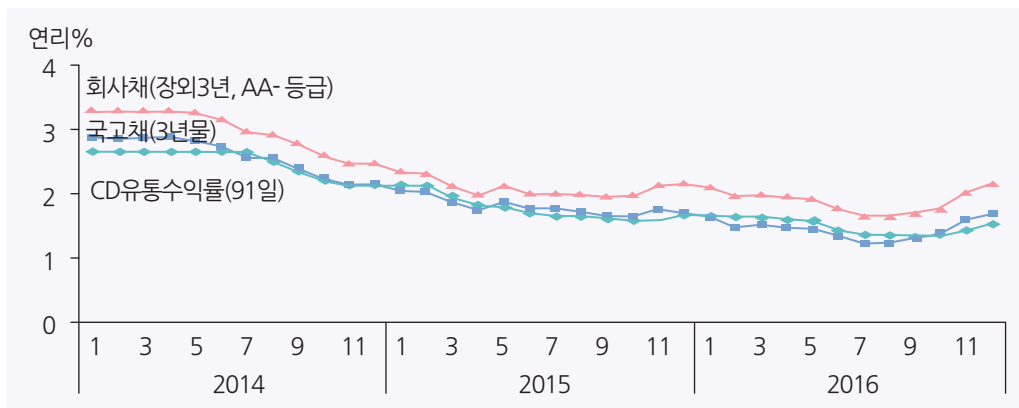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금리

- 2016년 국내 금리는 7월까지 하락한 후 대외여건변화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됨.
 - 2016년 상반기 국내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완만하게 하락함.

- 그 후, 2016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미국대선과 미국금리의 인상예고에 따라 국내 금리의 추세는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 2016년 12월 CD유통수익률(91일)은 1.54%, 국고채(3년)는 1.69%, 회사채(장외3년, AA- 등급)는 2.16%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7월 대비 각각 0.18%p, 0.47%p, 0.51%p 상승한 수치임.
- 2016년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현 금리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국내경기의 불황과 낮은 소비자물가수준을 반영하여 금리를 인하(1.50%에서 1.25%로 하향)함.
 - 금리인하 이후 수출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내수 회복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회복과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음.
- 미국의 기준금리는 2016년 12월 0.25~0.5%에서 0.5~0.75%로 인상되었으며 향후 점진적인 인상이 예고됨.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12월 14일 미국 경기의 개선과 물가 및 고용률의 증가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p인상을 결정했음.
 - 추가로 연방준비제도(Fed) 재닛 옐런 의장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의 단계별 인상을 예고하였음.
- 농식품 정책금리 분야에서는 시중금리 인하로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기준금리가 2017년부터 3.22%에서 3.09%로 인하됨.

[시장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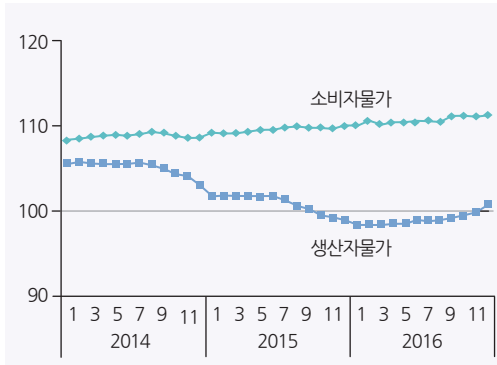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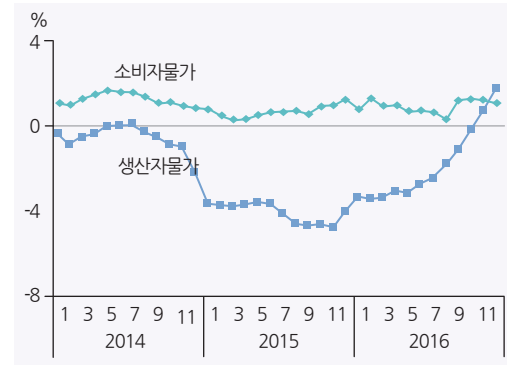
● 물가

- 2016년 하반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반기와 같은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음.
 - 9월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과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폭 상승함.
 - 2016년 전년동월대비 하반기 평균 등락률은 1%로 상반기 대비 0.06%p 상승했음.
- 생산자 물가지수는 2016년 상반기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합의와 미국 달러화의 강세의 영향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하반기 전년동기대비 등락률 역시 상승하여 11월부터 음(-)에서 0.73%로 양(+)의 수치로 전환되었으며 평균 등락률은 상반기 대비 2.63%p 상승하였음.
- 농축수산물 부분의 2016년 하반기 물가수준은 전체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지수 모두 상승하여 9월에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
 - 농림축산물 부분 하반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5.79%로 상반기 대비 2.54%p 상승함.
 - 특히 9월의 농림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24.5로 전년동월대비 10.21% 상승하였음.
 - 이는 2016년 여름(7-8월) 폭염으로 인한 고랭지배추의 작황 악화와 8월 하순 집중호우로 인한 출하여건 악화가 겹쳐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기간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에 기인함.
 - 하반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7.73%이며 상반기와 비교하여 3.67%p 상승했음.
 - 9월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같이 이상기후의 영향 등으로 119.8 전년동월대비 14.32%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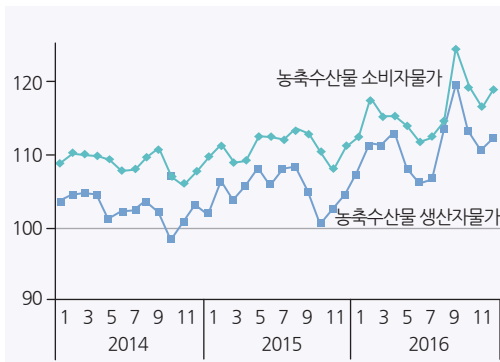
[물가지수(총지수, 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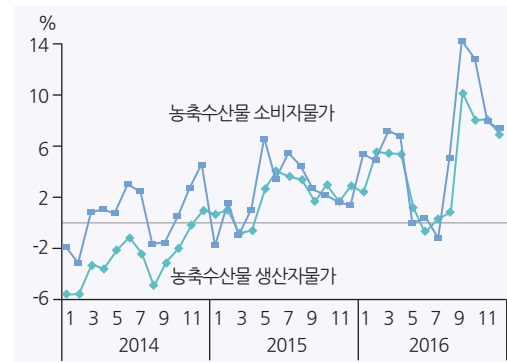
[물가지수 등락률(전년동월비)]



[물가지수(농림축산물, 2010=100)]



[물가지수 등락률(농림축산물, 전년동월비)]



자료: 통계청

● 환율

- 2016년 하반기 대미 환율은 9월까지의 소폭하락 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였으며 미국달러의 강세가 지속됨.
 -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시기가 12월로 지연됨에 따라 9월 1달러 당 대미 환율은 1,108원까지 하락하였음.
 - 그 후 대미환율은 11월 미국대선 결과 트럼프후보의 당선과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결정(0.25~0.50%에서 0.5~0.75%수준으로 인상)이 잇따르면서 12월에는 1,182원까지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임.

– 2017년 1월에 취임할 미국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²⁾, 규제완화, 대규모 재정지출에 기반을 둔 경기부양 정책 시행과 미국연방은행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예고에 따라 향후 2017년 상반기 대미환율은 1달러 당 1,200원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상반기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던 대일 환율은 2016년 하반기 부터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함.

– 6월 100엔 당 1,108원을 기록했던 대일 환율은 11월까지 완만하게 하락한 후 12월에는 1,019원(전월 대비 5.1%하락)으로 가파르게 하락함.

–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정책의 고수와 더불어 브렉시트, 저유가, 미국금리 인상설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누그러짐에 따라 고평가되었던 일본 엔화의 가치가 다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상반기에 있을 유럽 주요국가의 선거시즌, 브렉시트 협상, 미국 트럼프정부의 행보에 따라 향후 대일 환율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

■ 대중 환율은 2016년 상반기의 하락세가 이어지다 9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음.

– 1위안 당 원화 가격은 6월에는 177.3원이었으나 9월에는 165.7원까지 하락한 이후 소폭 상승추세를 유지하여 12월에는 170.7원을 기록하였음.

– 2016년도 초중반기의 위안화 약세는 중국의 성장둔화세와 자본유출 우려 및 추가폭락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에 의해 지속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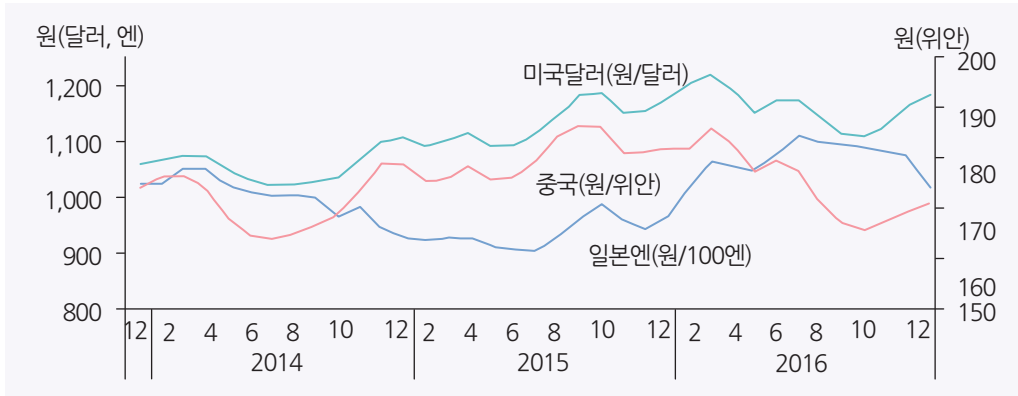
– 이후 2016년 하반기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미국 달러화의 강세에 대응하여 위안화의 가치를 절상함과 미국의 대중국 환율·무역정책³⁾ 따라 대중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 엔화와 비슷하게 대중 환율 역시 세계 주요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함.

2) 보호무역으로서 자유무역협정(NAFTA, FTA)의 재협상, TPP탈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중국제품에 대한 고관세율 책정 등을 명시하였다.

3) 특히 일본 및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하여 환율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환율 변동]



주: 2016년부터 중국위안화는 직거래시장의 매매기준율 방식을 따름.

자료: 한국은행

●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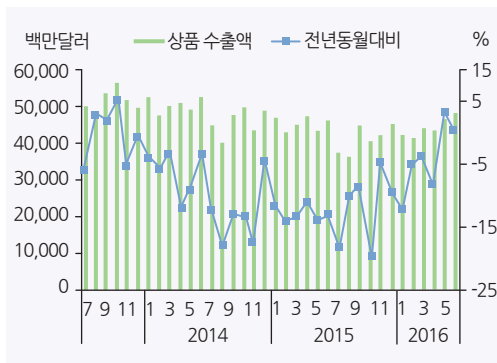
- 2016년 하반기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 및 수입 규모가 축소되었음.
 - 2016년 5월까지의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평균 11.9%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평균 16.5%만큼 감소하였음.
 - 지속되는 저유가 추세와 2016년 상반기 중국의 주가폭락, 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음.
 - 수출부분과 마찬가지로 국내 상품수입역시 저유가추세에 따른 원자재의 수입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했음.
- 2016년 하반기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확대되었음
 - 2016년 12월의 우리나라 상품수출액은 47,953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하반기 평균 전년 동기대비 등락률은 -1.4%로 상반기 대비 8.3%p 증가하였음.
 - 상품 수입액(FOB조건)은 12월 38,520백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전년동월대비 등락률은 1.3%, 상반기 대비 8.3%p 상승함.
 -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가의 더딘 경제회복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은 완만만 증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
 - 상품 수입은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하반기 상품수지는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불황형 흑자가 지속됨.

– 전년동월대비 하반기 평균 등락률은 -9.7%로 작년 상품수지의 대폭 증대로 인한 기저효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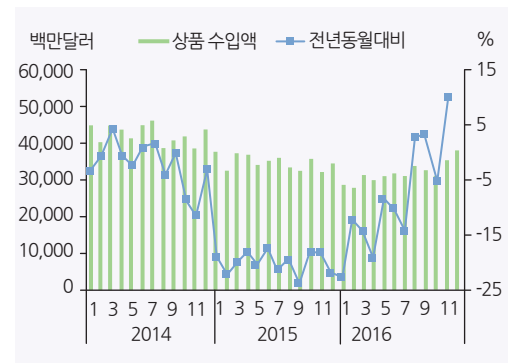
■ 농림축산물 부분에서도 수입과 수출이 모두 증가함.

- 하반기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9%, 상반기 대비 6.8%p 증가하여, 상반기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됨.
- 하반기 수입은 상반기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전년동월대비 평균 8.8%(상반기 대비 5.2%p증가)증가함.
- 수출액이 증가한 주요 품목으로는 파프리카와 라면 등이 있으며 파프리카의 경우 엔고현상과 저유가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로 일본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라면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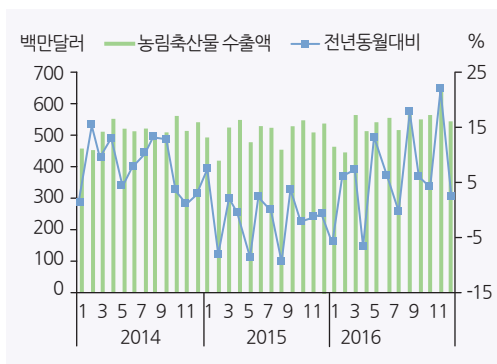
[상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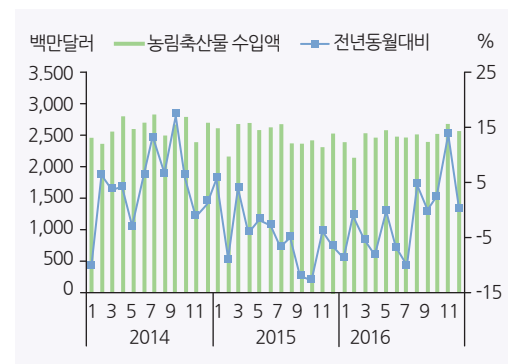
[상품 수입]



[농림축산물 수출]



[농림축산물 수입]



자료: 한국은행

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kati.net)

04 2017년 국내외 금리 전망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금리전망

04 2017년 국내외 금리 전망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금리전망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미선 선임연구원



국내·외 거시지표 이슈분석은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에 실리는 주요 지표 중 최근 이슈가 되는 지표의 의미, 동향, 전망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층 분석을 실는 코너이다. 2017년 상반기에는 저금리 기조에서 미국 연준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금리'지표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올해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에 시장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통화정책을 변경할 경우 한국 등 여타 국가들의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금융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과 금리 변동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그리고 올해 국내외 금리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 것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

먼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이다.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일정기간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정책금리 조정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통화정책 운영 체계이다. 즉, 중앙은행은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5년 12월 중기(2016~2018년) 물가안정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대비) 2.0%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물가안정만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법(2011년9월 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금융안정에도 유의함은 물론이며 경제성장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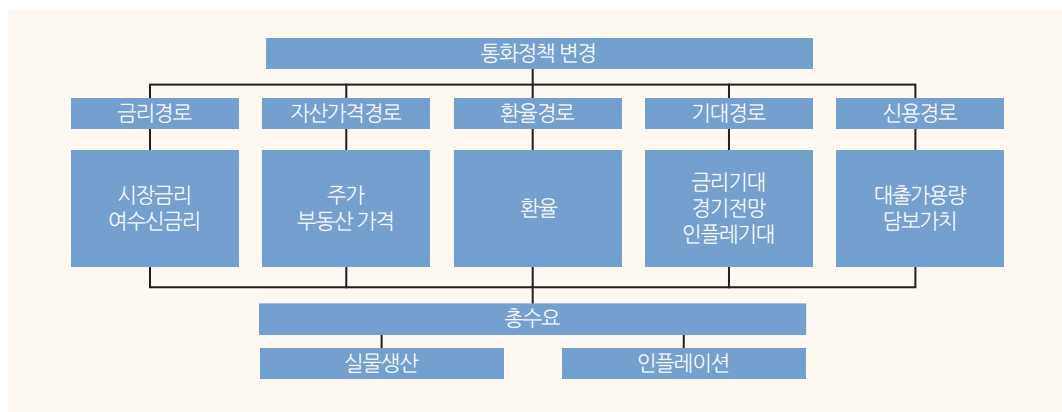
지난 2012~2014년 글로벌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국도 1%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졌다. 만약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을 목표로 한다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어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수입물가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화가치를 지나치게 떨어뜨릴 경우 원화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감소해 국내로 유입되었던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한국은행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외에도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함께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경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 변수들이 변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변수들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파급된다.

통화정책이 생산 및 물가 등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는 금리경로(interest rate channel), 자산가격경로(asset price channel), 환율경로(exchange rate channel), 기대경로(expectation channel), 신용경로(credit channel) 등이 있다.

[그림 1.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자료: 한국은행, 하나금융투자

① 기준금리 변경은 금리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면 단기시장 금리와 함께 장기시장 금리, 은행 여수신금리가 하락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총생산의 증대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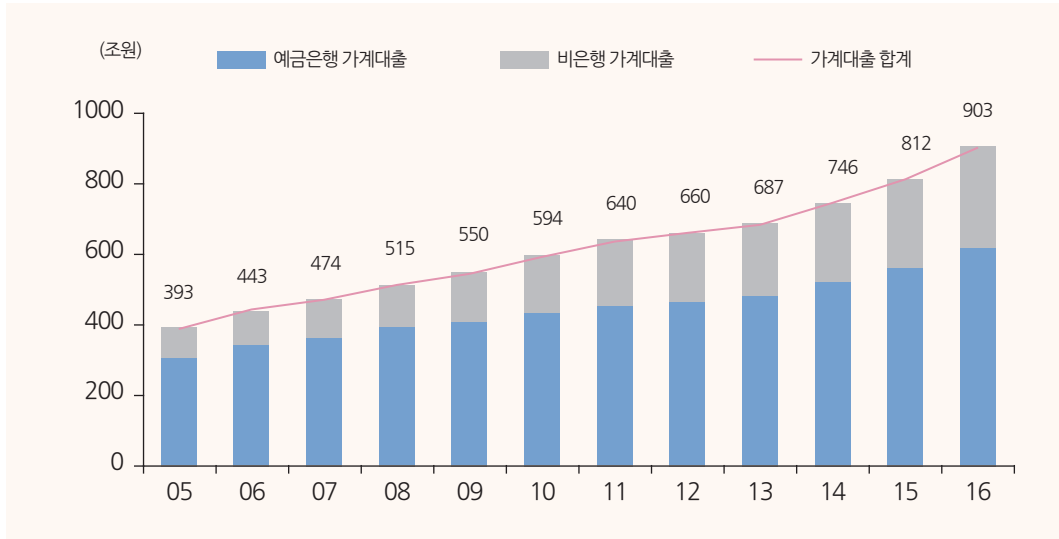
기업은 대부분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를 하는데 금리인하로 차입비용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와 내구소비재의 구입이 할부금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의 변화는 개인의 소비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 한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왜 경제 회복이 더딜까?

다만 투자나 소비는 금리뿐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변화가 실물 부문에 파급되는 효과가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니다. 최근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기준금리를 장기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나 가계소비가 뚜렷하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투자의 경우 금리보다는 미래의 사업전망이나 경기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기업에 잉여자금이 이미 충분히 많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가계의 경우 이미 과도한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아무리 저금리라 하더라도 대출을 더 받기는 어려워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림 2. 한국은행의 가계부채비율]



자료: 한국은행, 하나금융투자

② 기준금리 변경은 부동산, 주가 등 자산가격에 영향

두 번째로, 통화정책의 자산가격 경로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책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식이 오르면 그만큼 부가 늘어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국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시장과의 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금리하락과 통화량 증가는 주택 등에 대한 수요를 늘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가계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은 이전보다 부유해진 것으로 생각해 소비지출을 늘릴 개연성이 커지고 전반적인 소비와 기업의 이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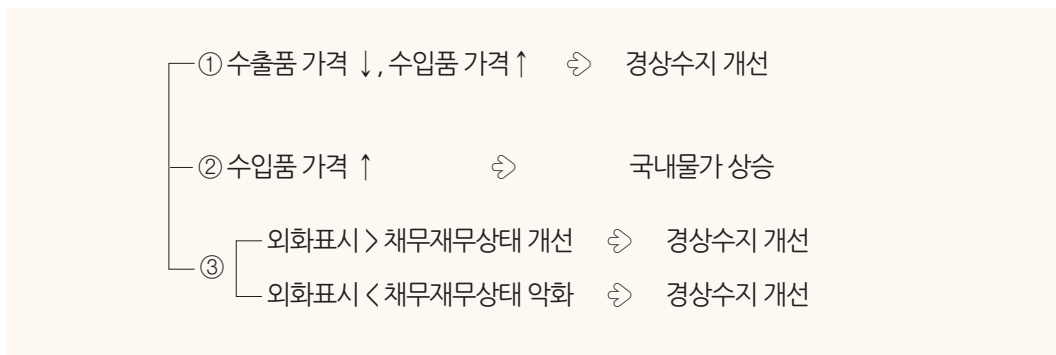
한편 최근 한국에서는 높아진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부동산대출이 더 늘어나게 되고 가계의 부채비율 증가는 부메랑이 되어 가계의 소비여력을 줄인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은 더 이상 늘지 않겠지만, 이미 과다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아놓은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경기가 빠르게 냉각될 위험도 있어 금리인상 역시 쉽지 않다.

③ 기준금리 변경은 환율경로를 통해 수출 등에 영향

자율변동환율제도하에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은 환율의 변화를 통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준금리 조정은 국내 시장금리 변화를 초래하여 자국통화 표시 금융자산과 외국통화 표시 금융자산 간의 기대수익률 격차를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킨다. 이는 다시 국내외 금융자산에 대한 상대적 수요 변화를 유발하고 외화 수급에 영향을 주어 결국 환율도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내금리가 하락하면 원화표시 정기예금 등의 수익률도 함께 낮아지고, 투자자들은 국내 금융자산은 매각하고 외국통화 표시 금융자산을 매입하고자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외국통화를 매입하게 된다면 외국통화 대비 자국통화가치는 하락(달러-원 환율 상승)하게 된다.

[그림 3. 환율경로를 통한 경상수지 및 물가 변동 과정]



자료: 한국은행, 하나금융투자

이러한 환율 변동은 다시 수출입 상품의 상대가격,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환산한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자국통화로 환산된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변화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또는 환율변화가 수입품 가격에 곧 반영됨으로써 국내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달러-원 환율이 10% 상승하게 되면 자국통화로 환산된 수입품 가격도 10% 상승하게 된다.

환율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금리의 변화, 즉 국내 통화정책이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환율이 금리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거나 이론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지 않는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기준금리 인하로 국내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강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기대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정뿐 아니라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경기전망 및 인플레이션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소비 및 투자결정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향후 상당기간 금리수준을 낮게 유지할 것으로 시장에 신호를 보내면 예상 단기금리의 평균치인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늘면서 총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기대경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기대경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⑤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 경로 등은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영향을 줌으로써 실물 경제에 파급된다. 이에 비해 신용경로는 통화정책이 은행대출에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정책기조를 완화하면 일반적으로 시중자금 가용량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이 증가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

한편, 이러한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금의 수요자가 은행대출 외에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갖지 않아야 한다. 회사채 발행 등 다른 조달수단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은행 대출을 통한 신용경로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반면에 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열위한 중소기업이나 가계의 경우 은행대출 경로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가계의 자금조달 부담이 더 높아지게 된다.

● 장기간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이 국내외 채권시장과 경제에 미친 영향

▶ 한국은행,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 3.25%에서 1.25%로 200bp 인하

한국은행은 2012년 7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이후 201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8번에 걸쳐 200bp를 인하했다. 이 기간 동안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고,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는 등 유례없는 통화완화가 이어졌다. 금리인하 외에도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채권 등 금융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추었음에도 자금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수준이 훨씬 낮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국고3년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하나금융투자

[표1. 현재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국가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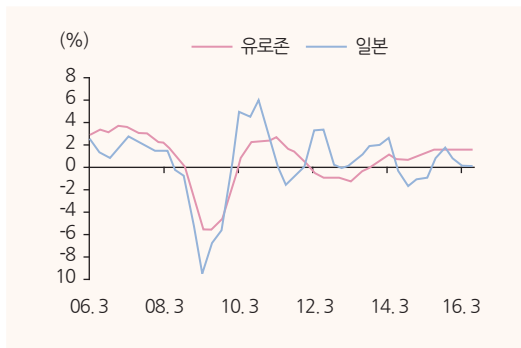
중앙은행	최초도입	기준금리	수신금리	대출금리	정책원인
ECB	2014년 6월	0.00	-0.40	+0.25	저물가 기초 대응
스웨덴	2009년 7월	-0.50	-1.25	+0.25	저물가 기초 대응, 통화안정
덴마크	2012년 7월	NA	-0.65	+0.05	통화안정
스위스	2014년 12월	-1.20~-0.25	-0.75	NA	통화안정
일본	2016년 1월	NA	-0.10	+0.30	저물가 기초 대응

주: ECB, 스웨덴, 스위스의 기준금리는 각각 MRO, RP 7일율, 3개월 Libor 금리
 자료: 각국 중앙은행, 하나금융투자

이러한 각국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실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대체적인 중론은, 금융위기 직후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고 민간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주체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실제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부터는 시중 잉여자금이 넘쳐나게 되면서 아무리 금리를 인하하고 중앙은행이 자산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림 5.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유로존, 일본 성장을 부진]



자료: 한국은행, 하나금융투자

[그림 6. 장기간 이어진 금리인하에도 국내 성장을 부진]



자료: 한국은행, 하나금융투자

기업들이 보유한 잉여현금이 넘쳐남에 따라 기준금리를 아무리 인하해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자극하기 어려워졌다. 즉, 경기에 대한 기대 자체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상 기준금리 인하의 정책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 한국의 경우 이미 너무 많은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금리를 인하해도 가계는 부채를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금리경로가 잘 작동하여 금리인하를 통해 부동산대출이 늘어난다면 가뜩이나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어 금융안정성이 위협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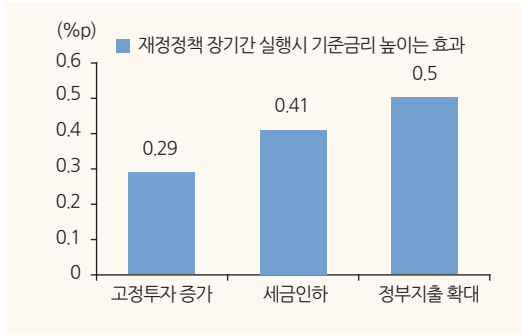
이러한 통화정책의 한계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IMF는 작년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행시장의 발달로 대출을 통한 실물 경제의 파급효과가 미미했던 반면 저금리가 지속되자 오히려 장기채권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채권 고평가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위험이 높아졌음을 지적했다.

▶ 통화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재정정책으로 무게중심 이동하는 추세

통화정책의 한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이후 재정정책으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차원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존하여 경기를 부양해왔다. 그러나 점차 그 한계가 드러나고 부작용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고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정책 변화 가운데 미국에서는 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와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이 올해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 명분도 약해지게 되었다. 연준의 조사에 따르면 고정투자 증가, 세금인하, 정부지출 확대 등의 정책을 10년간 실행 시 미국의 중립금리를 약 0.3~0.5%p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립금리는 미국의 장기적인 기준금리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Tax Foundation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조세정책이 장기간 실행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GDP를 6.9~8.2% 높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7. 미국 재정정책이 기준금리에 미치는 영향]



자료: Fed, 하나금융투자

주: 각 재정정책을 10년간 실행했을 때 장기적으로 미 중립금리를 높이는 정도를 추정

[그림 8. 트럼프 조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트럼프 조세정책에 따른 경제적 영향 (Tax Poundation 추정)	
GDP	6.9%~8.2%
기본투자	20.1%~23.9%
임금상승률	5.4%~6.3%
전일제근무자 증가	1,807~2,155천명

자료: Tax Foundation, 하나금융투자

주: 조세정책 10년간 실행했을 때 향후 10년 동안 미 경제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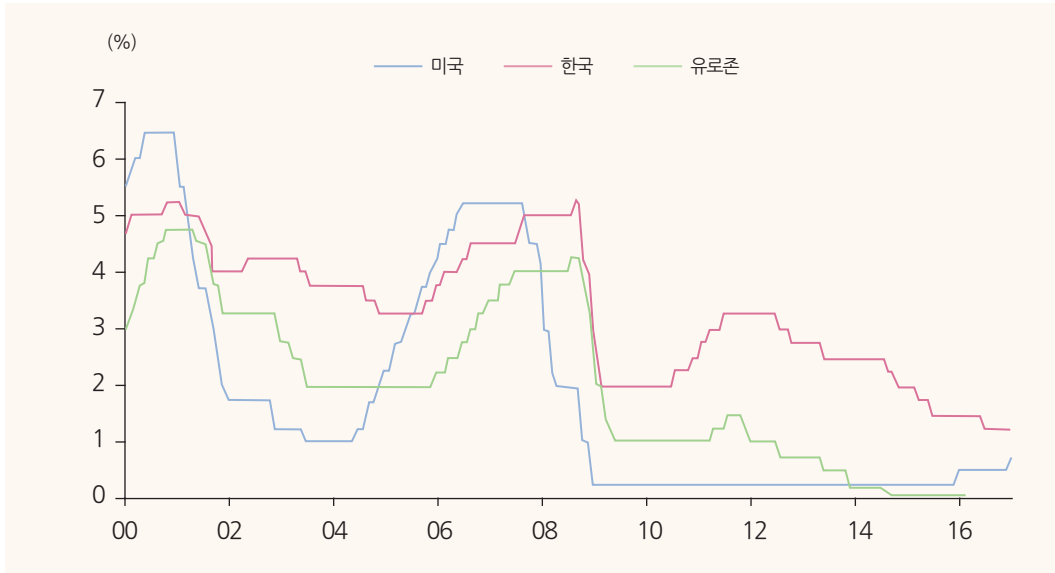
재정정책은 미국의 실질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어 연준의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에 상승요인이다. 연준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한번씩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 3번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중요한 이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대체로 비슷하게 결정되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중앙은행 Fed(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자 유럽중앙은행(이하 ECB)과 일본중앙은행(BOJ)도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한국은행(BOK)도 기준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기준금리 동반 인하 흐름 속에서 한국은행만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유는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고 본원통화를 늘려 시중에 통화량을 확대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통화가치는 낮아지고,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채 유지하고 있는 한국 등 여타국가의 통화는 상대적으로 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글로벌 자금이 통화절상국가로 대규모 쏠리면서 유동성이 과도하게 증가해 자산가격 버블을 형성할 위험이 높아진다.

[그림 9. 미국, 유로존, 한국의 기준금리 방향은 시차를 두고 동행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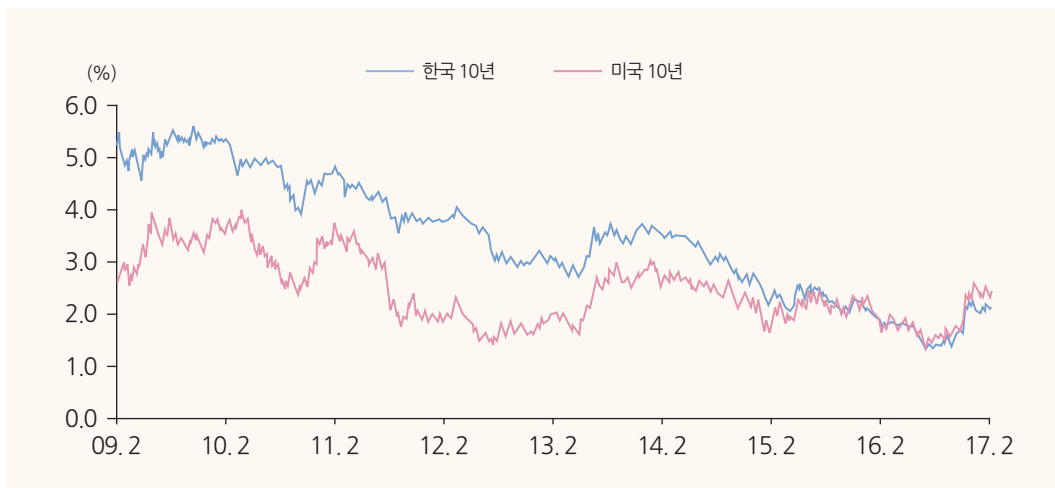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또한, 수출국가인 경우라면 여타국이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통화가치를 낮출 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수출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원화가치가 높을 경우 달러로 환산된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본 등 여타 경쟁국 대비 국내 자동차 가격이 미국 판매시장에서 비싸게 책정된다. 따라서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주변국들은 이러한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금리인하 결정에 동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10. 한국과 미국의 장기금리 동조화 심화]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반대로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는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뿐 아니라 유로지역도 최근에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통화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역시 글로벌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다. 유로존과 일본 중앙은행은 올해 하반기 자산매입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 한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원화에 대한 약세 압력이 높아지면서 수입물가가 오르고, 외국인이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은 국내 경기상황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결정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향후 계획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장기간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

미 연준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0~0.25%로 인하했으며, 기준금리가 제로에 근접함에 따라 더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자산매입을 실행했고,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해왔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연준의 자산규모를 축소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2014년 9월 연준은 (1) 경제여건 및 전망 개선 시 금리를 인상하고 (2) 금리인상 후 완만하게 보유자산 재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 (3) MBS 매각을 정상화 과정에 불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점차 축소하기 시작해 같은 해 10월 매입을 중단했고, 이후에도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12월 0.25~0.5%로, 2016년 12월 0.5~0.75%로 25bp씩 인상하며 완만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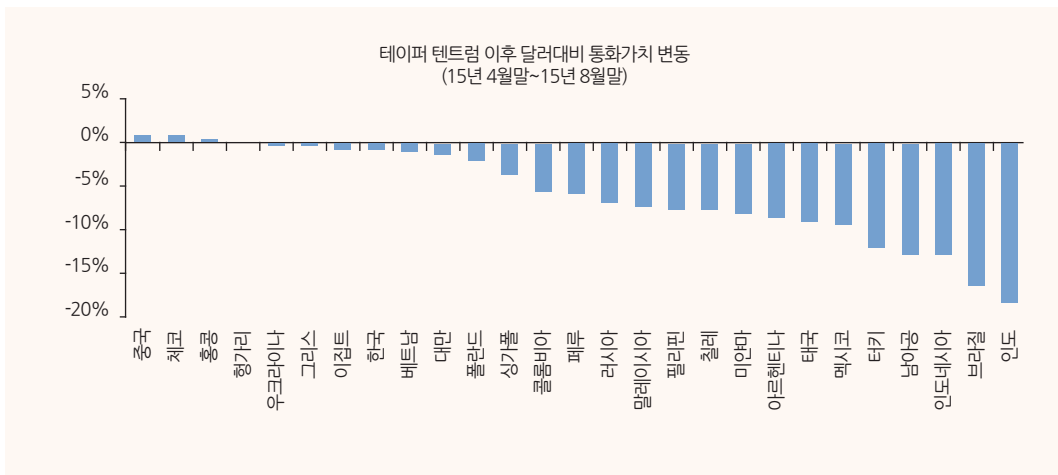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예상 파급경로

미국 금리인상으로 통화가치 및 주가,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난 2013년 5월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고, 발언 직후 신흥국으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 신흥국 통화는 3개월 만에 7%, 주가는 12% 하락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버냉키 발언 직후 한달 동안 외국인 주식 순매도액이 5조원을 넘어서고 주가가 9.8%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겪었다.

미국 금리인상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생산과 수출에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테이퍼 텐트럼 당시 신흥국 통화큰 폭 절하]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 2017년 한국 금리전망

▶ 미국, 올해 기준금리 3회 인상할 경우 연말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작

미국 연준은 올해 3번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겠다고 전망했고, 시장은 3월 초까지는 2번의 미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다가 최근에는 3번 인상 가능성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미국이 올해 3번 인상에 나설 경우 2017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1.50%에 다다르게 된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동결한다면 연말에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한국은행으로서는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미국 기준금리와의 역전 가능성과 이로 인한 영향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에 머물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는 근거다.

올해 미국은 단계적인 금리인상에 나서고, ECB와 BOJ도 하반기부터는 자산매입규모 축소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에 단기시장 금리를 인상하며 점진적인 긴축기조에 들어갔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 축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시차를 두고 한국은행이 동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상반기 경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부터는 한국도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 향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통화정책 일정들

올해 연준은 총 8번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이 중 3월, 6월, 9월, 12월에는 연준위원들이 예상하는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등이 함께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연준은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회의 때에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을 변경해왔다. 충분한 경제데이터가 확보된 상태에서 통화정책을 변경할 만한 명분이 갖추어졌을 때에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나서는 경향이 강하다.

[미 연준 통화정책회의 일정]

2017 FOMC Meetings	
Jan/Feb	31-1
March	14-15*
May	2-3
June	12-3-14*
July	25-26
September	19-20*
Oct/Nov	31-1
December	12-13*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 일정]

월	회의일자
1월	1월 13일(금)
2월	2월 23일(목)
3월	
4월	4월 13일(목)
5월	5월 25일(목)
6월	
7월	7월 13일(목)
8월	8월 31일(목)
9월	
10월	10월 19일(목)
11월	11월 30일(목)
12월	

▶ 연준은 통화정책 결정 시 국내외 경기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향

더불어 미국 연준은 물가와 완전고용이라는 공식적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 외에도, 글로벌 경기나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15년 12월 첫 기준



금리 인상 이후 연준은 2016년 4번의 금리인상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2016년 초 중국의 예상치 못했던 위안화 절하로 주가가 폭락하며 변동성이 커지자 금리인상을 지연시켰다. 또한 2016년 6월 영국의 EU탈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했고, 2016년 11월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도 인상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은 첫 금리인상 이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한번 단행될 수 있었다.

2017년의 경우에도 연준은 3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3월부터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및 글로벌 경기 개선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만약 미국 및 유럽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진다면 연준의 금리인상 횟수는 3번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주의하자

2분기 이후 미국의 여러가지 정책 입법화가 마무리되고, 무역상대국에 대한 통화절상 압력이 누그러진 이후부터는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6월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부터는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2018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국 감세안이 본격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올해 국내외 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에 주의해야겠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일정들을 참고하여 상반기 중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두거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변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권투자자의 경우 장기채보다 단기채에 투자함으로써 금리상승에 따른 손실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

05 거시경제 전망

세계경제
국내경제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과 경상수지
물가
고용
2017 경제전망 기관별 비교

요약

- (세계경제전망) '1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4%(IMF)로 미국과 신흥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완만한 회복세 전망
- (경제성장) 수출경기 회복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설비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진과 내수 침체로 인하여 2%대의 저성장 지속
 - (민간소비) 가계소득개선이 지연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완만한 증가
 - (설비투자)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로 전환
 - (건설투자) 주택 공급과잉·정부 SOC 예산 감축으로 인해 미미한 증가 전망
 - (농업)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할 전망이나,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 국내 소비 정체·감소 등으로 인해 실질적 개선 어려움.
- (수출입)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 되겠으나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전망
 - (농업) 달러화 강세로 수출 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전망
- (소비자물가) 내수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소폭 상승할 전망
 - (농업) 국제 유가 상승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보다 1.2% 상승하고,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0.7%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고용) 내수둔화와 제조업 부진으로 인해 고용여건이 악화되어 실업률이 소폭 상승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저임금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5장은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포스코 경영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OECD에서 발간한 2017 경제전망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고, 농업부문 전망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농업전망 2017」의 내용을 참조함.

04 거시경제 전망

● 세계경제

■ 세계경제성장률

- 미국과 신흥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성장률은 연간 3.4% 완만하게 오를 전망(표1)
- (선진국) 미국은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민간소비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완만한 오름세를 지속하고, EU와 일본은 미약한 회복세
- (중국)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기업부채, 구조조정, 자금유출 등 위험요인 잠재
- (신흥국)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원 수출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심리개선 및 수요 확대

■ 환율

- (달러화) 美 연준 금리 인상 등으로 달러화 강세 전망
- (엔화) 美 금리 인상으로 미-일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엔화 약세가 전망되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경우 안전자산인 엔화의 가치가 오를 수 있음.
- (위안화)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 감소,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등으로 작년에 이은 위안화 약세 전망

■ 국제교역

- 미국과 신흥국의 수요가 개선됨에 따라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 및 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 교역 위축 가능성 존재

■ 국제유가

- OPEC이 감산에 합의하면서 원유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는 한편 세계 경기가 회복되어 소비가 증가하면서 원유 가격 배럴당 51달러 전망

○ 국내경제

-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와 설비투자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 부진, 내수 둔화로 인해 2%대의 저성장 지속

* 정부 2.6%, 한은 2.5%, KDI 2.4%, 민간부문 2.3%, OECD 2.6% 전망

-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16년 5월 3.7%에서 12월 4.5%(p)로 소폭 상승하여 '16년 4/4분기 부진했던 경기가 '17년 상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지표 악화로 실질적인 경제회복은 어려움(그림1).

- (농업) 농업생산액이 전년 대비 0.8% 증가하여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26조 5,650억 원으로 전망

- (재배업) 종자비를 제외한 비료비, 농약비, 농기계비 등의 투입재비는 전년보다 상승,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1.3% 감소,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17조 4,390억 원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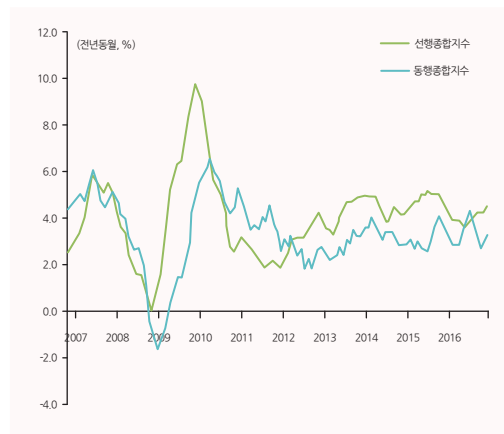
- (축산업) 사료비가 전년보다 0.5% 하락하는 한편, 축산업 생산액이 전년보다 3.7% 증가하여 축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9조 1,260억 원으로 전망

[표 1. 2017 세계 주요국 경제전망]

	2016	2017
세계	3.1	3.4
선진국	1.6	1.9
US	1.6	2.3
EA	1.7	1.6
일본	0.9	0.8
신흥국	4.1	4.5
중국	6.7	6.5
인도	6.6	7.2
브라질	-3.5	0.2
러시아	-0.6	1.1
남아공	0.3	0.8
아세안5	4.8	4.9

(출처: IMF)

[그림 1. 경기종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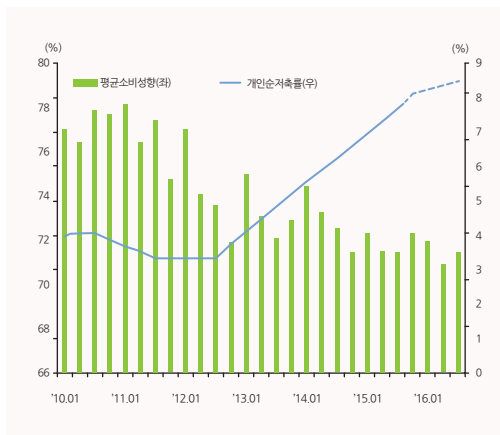


* 선행종합지수는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총 9가지 선행지표로 구성됨.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 7가지 지표로 구성됨. (출처: 통계청)

○ 민간소비

- 2017년 민간 소비는 가계부채증가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약 2%의 소폭 확대 전망
* 정부 2.0%, 한은 1.9%, KDI 2.0%, 민간부문 2.0%, OECD 2.4%
- (인구구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소비성향이 낮은 60대 이상 인구가 증가,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 젊은 층 인구 감소, 예비적 저축 증가 등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존재(그림 2)
- (가계부채) 가계부채 규모,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대출금리가 상승 등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그림 3)
- (구조조정) 제조업 부진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구조조정 가능성 확대, 임금상승압력 저하 등 가계소득개선이 지연
- (농업)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국산 농산물 소비 정체 감소세가 지속되는 이중고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부류별 소비량(kg/인) 전망(전년 대비, %): 7대 곡물(-0.2), 5대 채소(5.6), 6대 과일(0.1), 오렌지 및 열대 수입 과일(1.5), 3대 육류(-0.7)

[그림 2. 평균소비성향과 저축률 추이]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3. 가계부채액 및 증가율]



출처: 한국은행

● 투자

- 2017년 설비투자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기저효과로 증가하겠으나 국내 경제 침체로 제한적

* 정부 2.8%, 한은 2.5%, KDI 2.9%, 민간부문 2.3%

— '16년도 투자 부진으로 지연된 기존설비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교체 필요

* 기계수주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2016년 1/4 (4.0%) 2/4 (-3.2%), 3/4 (-4.5%), 4/4(p) (26.3%)

— 수출경기가 회복되면서 IT 부문 투자 증가

* IT 산업에서는 NAND Flash 반도체, OLED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 자동차 산업에서는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와 스마트카 등 신기술 투자 확대

— 제조업 가동률 하락(그림4),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여건 악화, 국내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 등 제약요인

- 2017년 건설투자는 착공면적 감소, 기저효과, 정부 SOC 예산 감축으로 인해 작년(10.5%) 보다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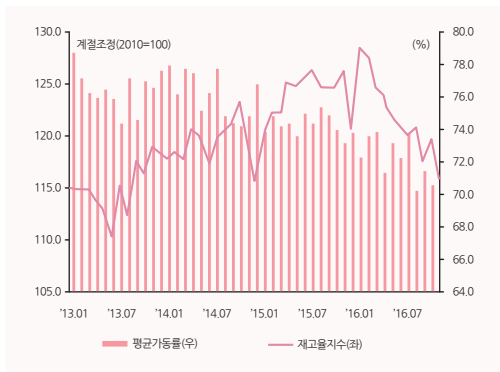
* 정부 4.0%, 한은 4.3%, KDI 4.4%, 민간부문 1.1%

— (건축) 주택거래량감소, 미분양 아파트 적체, 주택 공급과잉에 대한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택 투자 둔화 전망

* 건설수주액 상승률은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모두 전년대비 대폭 하락, 착공면적도 감소(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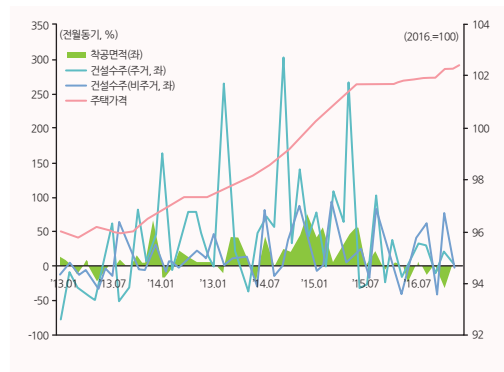
— (토목)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토목건설 둔화

[그림 4. 제조업 평균 가동률 및 재고율]



출처: 통계청

[그림 5. 건축투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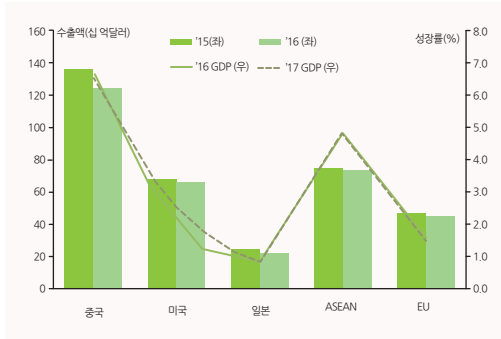


출처: 건설수주 「대한건설협회」, 주택가격 「한국감정원」, 착공면적 「국토교통부」 착공면적은 연면적, 건설수주는 건설수주액, 주택가격은 주택가격매매지수를 의미.

● 수출입과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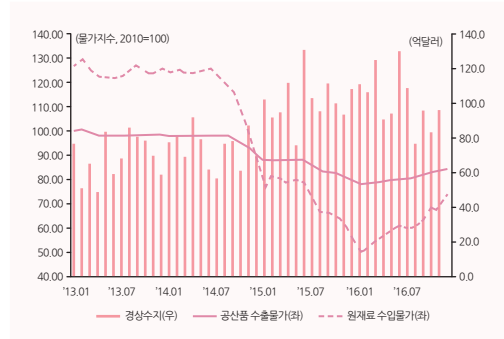
- (수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단가 상승, 자원수출국의 경기가 호전되면서 수입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액(통관기준) 증가(그림6)
* 정부 2.9%, 한은 4.3%, KDI 2.7%, 민간부문 3.3%
- (수입)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과 국내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입액(통관기준) 증가
* 정부 7.2%, 한은 8.0%, KDI 6.4%, 민간부문 5.7%
- (경상수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 폭이 수출액 증가폭보다 크고, 해외여행증가·운송업 구조조정에 따른 서비스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흑자폭이 '16년 970억 달러(잠정치, 한은)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그림7)
*정부: 820, 한은: 810, KDI: 857, 민간부문: 881 (단위: 억 달러)
- (불확실성) 미국 신정부 등장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제약조건으로 작용
- 농업부문
 - (수입) 곡물, 채소, 오렌지 및 열대과일 등 품목의 수입량이 증가하여 '17년 총 수입액은 248.9억 달러로 전년보다 3.0% 증가할 전망
 - (수출) '17년 달러화 가치 오르면서 수출단가가 하락하여 수출량은 전년보다 2.1% 증가하고, 수출액은 1.8% 증가할 전망
 - (무역수지) '16년보다 3.4% 감소한 186.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전망
 - (불확실성) 미 행정정부의 對中 통상 정책, 한-미 FTA 재협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이 우리나라 농업통상에 영향을 줄 전망

[그림 6. 주요교역국 수출입 및 경제성장률]



* '16은 추정치(estimate), '17은 전망치(projection)임.
(출처: 수출액「한국무역협회」, 경제 성장률「IMF」)

[그림 7. 수출입 물가지수와 경상수지]



경상수지 (상품수지만 포함), 원재료 수입물가
(원유 포함) (출처: 한국은행)

●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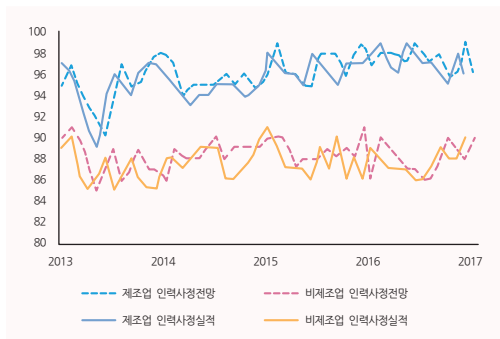
- 2017년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점진적 상승과 더불어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 정부 1.6%, 한은 8.0%, KDI 1.3%, 민간부문 1.5%
 - 내수경제 둔화, 구조조정에 따른 임금 상승 제약, 가계부채 및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취업난 등이 소비자 물가 상승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
 - (농업)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2% 상승 전망
 - 국제유가 반등으로 투입재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1.6% 상승한 106.1로 전망
 - 노임지수는 물가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8% 상승하나, 임차료 지수는 0.2% 하락할 전망
 - '16년산 국제 곡물 풍작으로 인해 '17년 사료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0.5% 하락한 101.9로 전망
 - (농업)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0.7% 하락 전망
 - (곡물) 쌀의 국내 생산량과 이월재고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쌀 가격이 '15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곡물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6.1%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청과) 과실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청과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5.5% 하락할 것으로 전망
- *'16년 이상 기후에 따른 단수감소가 '17년 회복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여 채소류 가격이 전년 대비 8.4% 하락할 전망

- (축산물) 돼지고기와 소고기 국내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17년 축산물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2.4% 하락할 것으로 전망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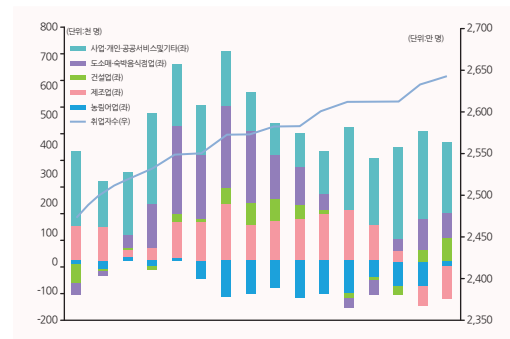
- 정부의 일자리·복지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진·서비스업 성장세 둔화로 '17년 실업률은 전년도(3.7%)보다 소폭 상승한 3.9% 전망
 - (제조업) '16년 하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력 산업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개선이 어려울 전망(그림8)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겠으나, 제조업 부진과 소비심리위축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어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고용의 질) 고용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주로 소매·숙박음식점, 보건·사회 복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등 저임금 산업에 집중되면서 고용의 질 악화 우려(그림9)
 - (청년실업) '16년 청년 실업률은 9~10%대로 다른 연령대(2~3.5%)에 비해 매우 높음. '17년 신규채용 축소, 경력직 선호로 인한 청년고용기피, 저임금 위주의 일자리 창출에 의한 인력 미스매치 심화 등으로 청년 실업문제가 지속
- (농림업취업자수) 농림업취업자수는 '96년 243만 명에서 '15년 135만 명까지 연평균 3.1%로 감소, '17년 '16년 추정치(133만 명)보다 1% 감소한 132만 명 전망

[그림 8. 업종별 인력사정 BSI 흐름]



출처: 한국은행

[그림 9. 산업별 취업자 증감]



* 좌측은 전년동분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감, 우측은 총 취업자 수(계절조정)를 나타냄. (출처: 통계청)

2017 경제전망 기관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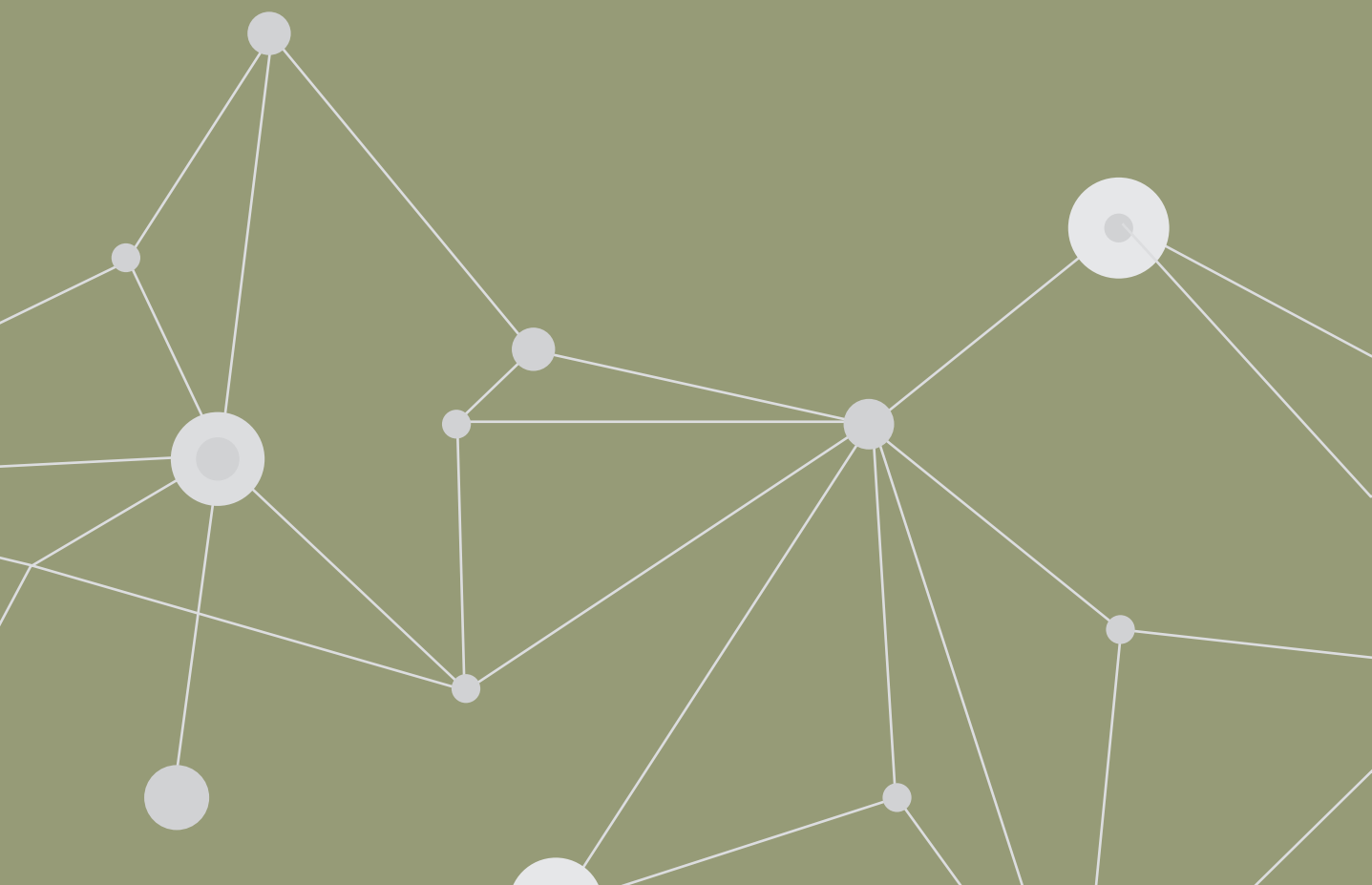
구분	정부	한은	국책 연구원	국제 기구	민간			기타		평균
기관목록	기획 재정부	한국 은행***	한국개발 연구원 (KDI)	OECD	포스코 경영 연구원	현대경제 연구원***	LG경제 연구원	국회예산 정책처	산업은행	
전망 시점	2016.12	2017.01	2016.12	2016.11	2016.11	2016.12	2016.01	2016.09	2016.12	
경제성장	2.6	2.5	2.4	2.6	2.4	2.3	2.2	2.7	2.6	2.5
소비 민간 소비	2.0	1.9	2.0	2.4	2.3	1.8	2.0	2.2	2.1	2.1
설비 투자 투자	2.8	2.5	2.9	3.51*	3.5	2.0	1.5	3.0	2.5	2.6
건설 투자	4.0	4.3	4.4		0.3	2.5	0.6	2.1	3.5	2.7
통관 수출 수출	2.9	4.3	2.7	-	3.2	4.8	2.0	2.8	2.8	3.2
통관 수입 수입	7.2	8.0	6.4	-	5.6	7.4	4.2	5.9	5.0	6.2
경상 수지 수지 (억달러)	820	810	857	-	922	830	892	890	838	857
소비자 물가상승률	1.6	1.8	1.3	1.5	1.6	1.5	1.4	1.6	1.8	1.6
실업률	3.9	3.9	3.9	3.8	3.7	4.1	3.7	3.7	3.8	3.8
국고채 금리 (3년만기)	-	-	-	-	1.5	-	1.5	1.7	-	-
세계 경제 전망	3.4	3.3	3.4	3.3	2.5	3.4	2.8	3.4	-	3.2

구분	정부	한은	국책 연구원	국제 기구	민간			기타		평균
기관목록	기획 재정부	한국 은행***	한국개발 연구원 (KDI)	OECD	포스코 경영 연구원	현대경제 연구원***	LG경제 연구원	국회예산 정책처	산업은행	
환율 W/\$	-	-	-	-	1,162	-	1,130	1,110	-	-
추세	상승	상승	유지	-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원유값** (\$/barrel)	51	51	48	-	53	51	49	-	-	50.5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설비 및 건설투자 평균값 계산에서 제외

**두바이유 기준

***현대경제연구원 (2016.12), 한국은행 (2017.01) 수정안 반영



06 농업 관련 재정 예산 현황

농식품부 2017년 예산 분석
보조 및 융자사업 분석

06 농업 관련 재정 예산 현황

● 농식품부 2017년 예산 분석

▶ 농식품 관련 총지출 규모

- 농식품분야 관련 2017년도 총지출 규모는 19조 6,221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농식품부 총지출 규모는 14조 4,8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음.
- 한편 국가전체 예산은 3.6% 증가하여 농식품 관련 예산 상승폭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 위주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면서, 농식품 관련 총지출이 국가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농식품부: '13년 4.0% → '17년 3.6%, 농식품분야: '13년 5.4% → '17년 4.9%
- 경제 분야가 지출효율화를 추구하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부분이 각각 전년 대비 -2.0%, -8.2% 감소하였으나 농식품분야는 소폭 상승함.

[농식품부 및 농식품분야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연도	국가전체		농식품분야		농식품부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2013	3,420,000	5.1	183,862	1.4	135,268	-1.1
2014	3,558,000	4.0	187,334	1.9	136,371	0.8
2015	3,754,000	5.5	193,065	3.1	140,431	3.0
2016	3,864,000	2.9	193,946	0.5	143,681	2.3
2017	4,005,000	3.6	196,221	1.2	144,887	0.8
2013-2017 평균 증감률	3.9		1.3		1.5	

주 1: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주 2: 농식품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부, 식약처(식품안전) 예산 및 기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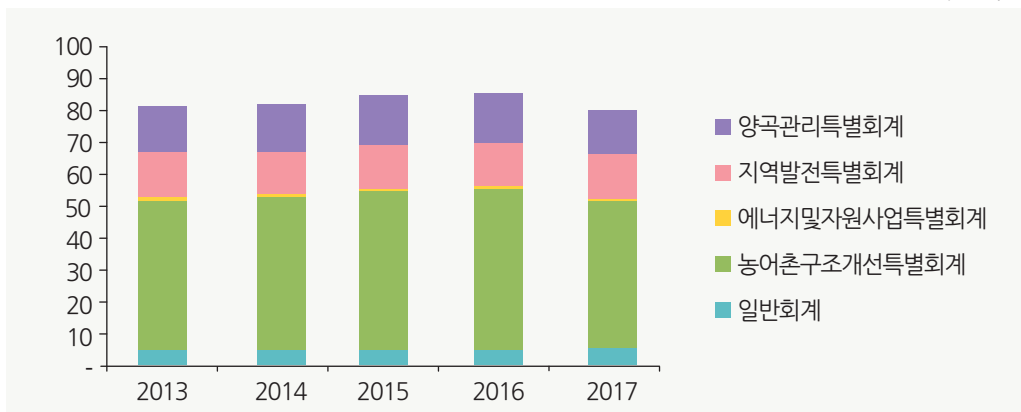
주 3: 기하평균으로 계산

▶ 회계·기금별 예산

- 예산 일반지출은 '13년 대폭 삭감(전년 대비, -10%)된 이후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기금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 762억 원으로 '16년 대비 6.2% 감소
 -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6조 4,125억 원으로 '16년 대비 11.3% 증가
- 예산 중 농특회계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특회계, 양특회계가 뒤를 잇고 있음.
 - 예산 중 농특회계 비중은 57.5%(4.6조)이며 지특회계는 17.6%(1.42조), 양특회계는 17.2%(1.39조)임.
 - 2017년 정부양곡매입비가 작년 대비 25.2%(2,572억) 삭감되면서 올해 지특회계 지출 비중이 양특회계를 앞지름.
- 기금의 총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안기금이며 이어 농지기금, 양곡기금순임.
 - 총 기금 중 농안기금의 비중은 27.8%(2.9조)이며 농지기금은 19.9%(2.1조), 양곡기금은 17.2%(1.8조)를 차지함.
- 직불기금과 양곡기금이 각각 전년대비 84.6%(7,122억), 74.7%(7,617억) 증가하여 기금 총 지출 증가를 견인
 - (직불기금) 산지 쌀값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쌀소득변동직불금 지출 확대
 - (양곡기금) '17년 상환 도래되는 공자기금차입 원금 규모는 1조 5,775억 원으로 '16년 (8,120억) 대비 94.3% 증가

[회계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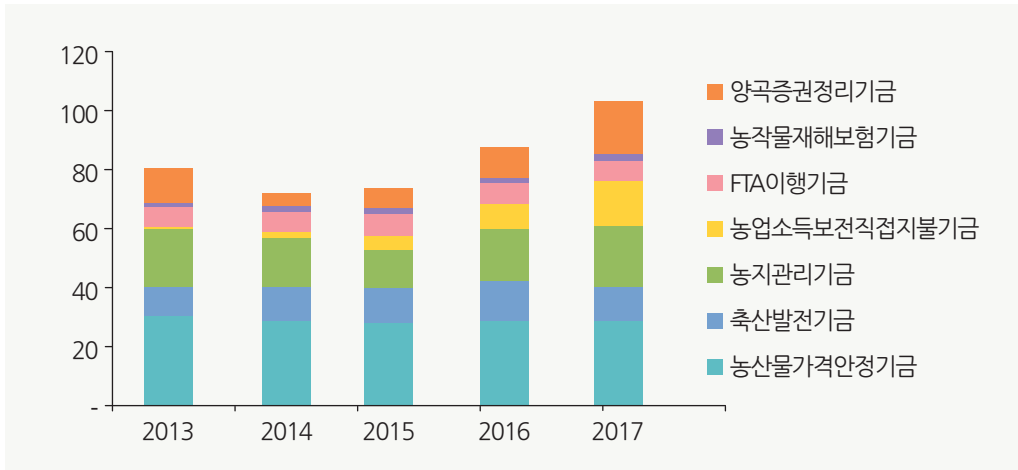
단위: 천억 원



자료: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기금별 예산]

단위: 천억 원



자료: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 프로그램별 예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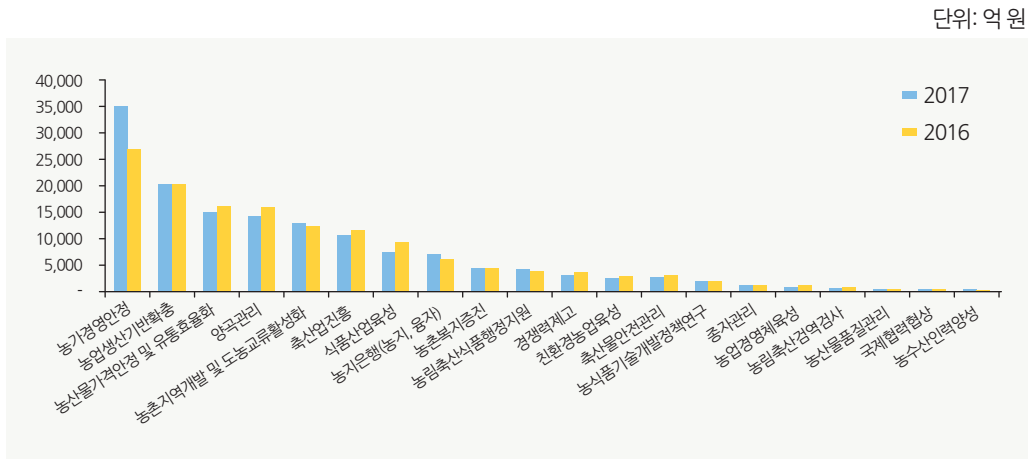
- 프로그램별 예산 규모를 보면 농가경영안정, 농업생산기반확충,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가 총 예산의 절반 차지
- (예산 증가)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32%(약 8,498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타 프로그램 총 증가액(약 1,297억)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임.
 - 예산이 증가한 프로그램은 농가경영안정, 농지은행,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농수산인력양성,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국제협력협상,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등 7개 프로그램임(증가액순).
 - 예산 규모는 크지 않으나 농수산인력양성이 전년대비 78% (약 197억)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예산 감소)양곡관리 프로그램과 식품산업육성 프로그램 예산 규모가 각각 전년대비 13%(약 2,033억), 20%(약 1,822억)감소하여 총 예산 감축액의 절반을 차지함.
 - 예산이 감소한 프로그램은 양곡관리, 식품산업육성, 축산업진흥,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경쟁력제고, 농업생산기반확충, 농업경영체육성, 친환경농업육성, 축산물안전관리,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종자관리, 농촌복지증진, 농림축산검역검사, 농산물품질관리 등 총 14개 프로그램임(감소액순).

– 농업경영체육성 프로그램은 전년대비 28%(약 294억)로 감소하여 타 프로그램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임.

■ (예산 변동)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예산 변동액은 다른 20개 프로그램들의 예산 변동액 총합의 94%으로 예산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예산이 증가한 프로그램들은 작년에 비해 총 9,035억 원(농가경영안정 제외하면 1,297억 원) 증가했으며, 예산이 감소한 프로그램들은 작년에 비해 총 7,738억 원 감소
–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 예산은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이 대폭 늘면서 증가

[프로그램별 예산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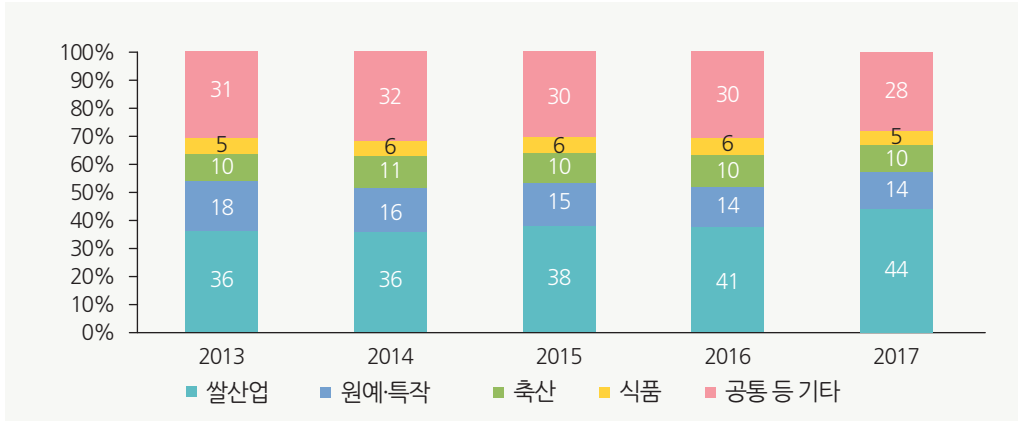
자료: 농식품부, 성과계획서, 각 연도

▶ 품목별 예산 비중

- 농식품부 총지출 중 쌀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44%로 전년대비 2.8%p증가하였고, 예산액은 전년대비 7.8% 상승한 6조 3,059억 원
- 쌀 산업 다음으로는 원예·특작 부문의 예산 비중이 높으나 그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13.7% 차지하였으나 예산액은 전년대비 0.74% 증가한 1조 9,909억 원
- 축산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은 작년대비 0.68%p 감소한 9.6%이며, 예산액은 전년대비 5.86% 감소한 1조 3,840억 원
- 식품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은 작년대비 0.55%p 감소한 5.2%이며, 예산액은 전년대비 5.86% 감소한 7,478억 원

[품목별 예산 비중]

단위: %



자료: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 사업부문/세부 사업별 예산 변동

- 사업 부문별로 보면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이 전년대비 24.5% (7,357억 원)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업체질강화, 양곡관리·농산물유통, 농업생산기반 조성 부문 예산이 약 6~8% 감소하여 총 지출 증가 제한
- (농가소득·경영안정) 산지쌀값 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⁵⁾ '16년 4,193억 원에서 '17년 1조 4,9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55% 증가
- (농업체질강화/식품업) 전문 농업인력 양성, 농업분야 ICT 확산, 신성장동력 등 사업부문 신규 사업 도입 및 예산 증액
 - － (전문 농업인력 양성) 한국농수산대학교운영 사업 전년대비 117%(196억) 증가,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3.4억), ICT 활용 체험형 교육·컨설팅(8억) 등 신규 사업 도입
 - － (ICT 확산) 첨단온실, 스마트 축사 등 기존 사업 예산 증액,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35억), 스마트팜확산지원(8.1억),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6.4억) 등 신규 사업 도입
 - － (신성장동력) 기후변화 대응강화, 곤충산업·반려동물 등 신분야 육성을 위해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36억),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69억) 등 신규사업 도입
 - － (식품업)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84억), 전통발효식품육성(69억) 등 신규사업 편성

5) 쌀소득보전변동직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 예산안 9,777억 원에서 5,123억 원이 증액된 1조 4,900억 원으로 최종 확정.

- R&D 사업, 사료 관련 융자 사업, 과수 생산유통지원, 가축개량지원, 농식품모태펀드출자, 농식품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지원(융자) 등 사업에서 예산 대폭 감소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 (양곡관리) 정부양곡매입비는 '16년 1조 208억 원에서 '17년 7,637억 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
- (농산물유통) 농산물마케팅지원, 쌀소비활성화,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등 소비촉진·유통 구조 개선 등 사업비는 증가하였으나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등 예산 대폭 감소

■ (농업생산기반조성)

- 수리시설개보수, 대단위농업개발(농특)이 각각 전년대비 12%(657억), 12%(117억)감소 하여 가장 두드러진 감소를 보임
- 새만금지구(내부개발)이 전년대비 5%(108억) 증가,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이 전년대비 53%(80억) 증가하여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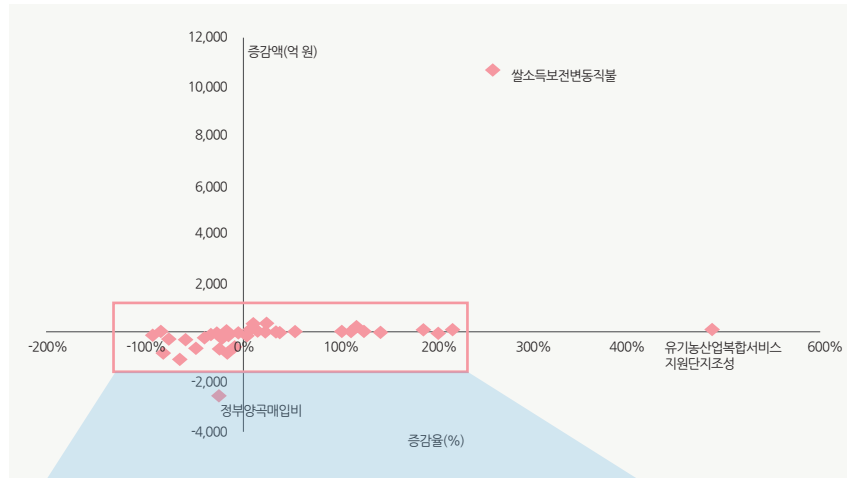
■ (식품업)

-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평창올림픽 음식관광 기반조성 등 사업 내용을 추가하면서 전년대비 200%(12억 원) 증가, 전통발효식품육성 전년대비 63.1%(53억 원) 증가, 3,805억 원 규모의 농식품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지원(융자)과 선진화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84억 원) 등 신규 사업 편성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이 전년대비 8.3%(109억 원) 감소, 신선농산물수출지원(4,003억 원)과 가공식품수출지원(2,293억 원) 사업 폐지

-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농업인 소득 및 경영과 관련한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25개 사업에서 5,807억 원 증액된 반면 융자사업인 산지유통종합자금,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 예비비적 성격의 살처분보상금, 재해대책비 등 36개 사업에서 5,141억 원 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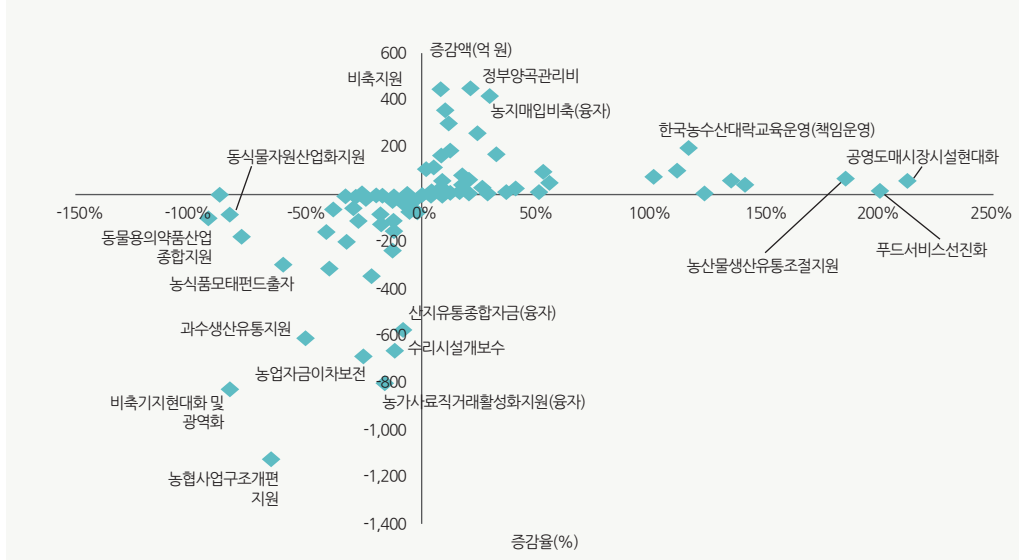
[세부사업별 예산 변동]

단위: 억 원, %



[세부사업별 예산변동 II]

단위: 억 원, %



* <세부사업별 예산변동 II>는 예산변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정부양곡매입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을 확대하여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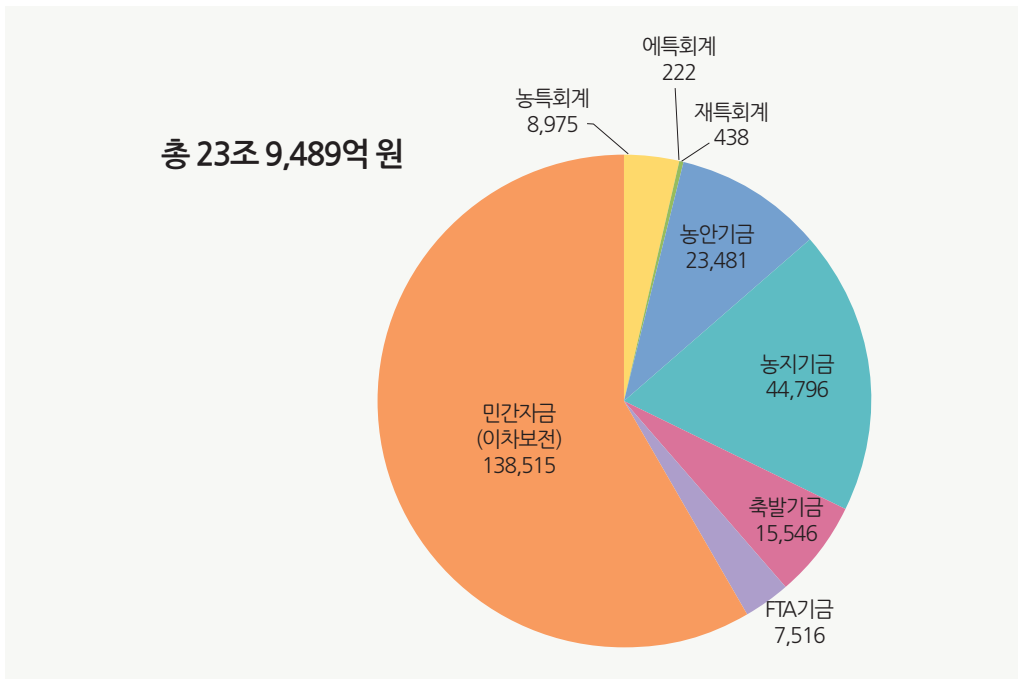
자료: 농식품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 농식품부 2016년도 성과계획서

▶ 용자 및 이차보전 지원현황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을 통한 농업부문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2015년 말까지 23조 9,489억 원임.
 - 전체 대출잔액 중 57.8%가 이차보전 형식으로 민간자금에서 지원되었고 나머지 42.2%는 재정용자 형식에 정부자금으로 지원됨.
 - 전체 대비 회계·기금 별 비중은 농지기금 18.7%, 농안기금 9.8%, 촉발기금 6.5%, 농특 회계 3.7% 순으로 나타남.
 - 정책자금 취급기관 별로는 농협이 17조 8,391억 원(전체 대비 74.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4조 6,777억 원(19.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540억 원 (2.7%)로 나타났음.
 - 농지기금의 대부분의 정책자금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농안기금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음.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2015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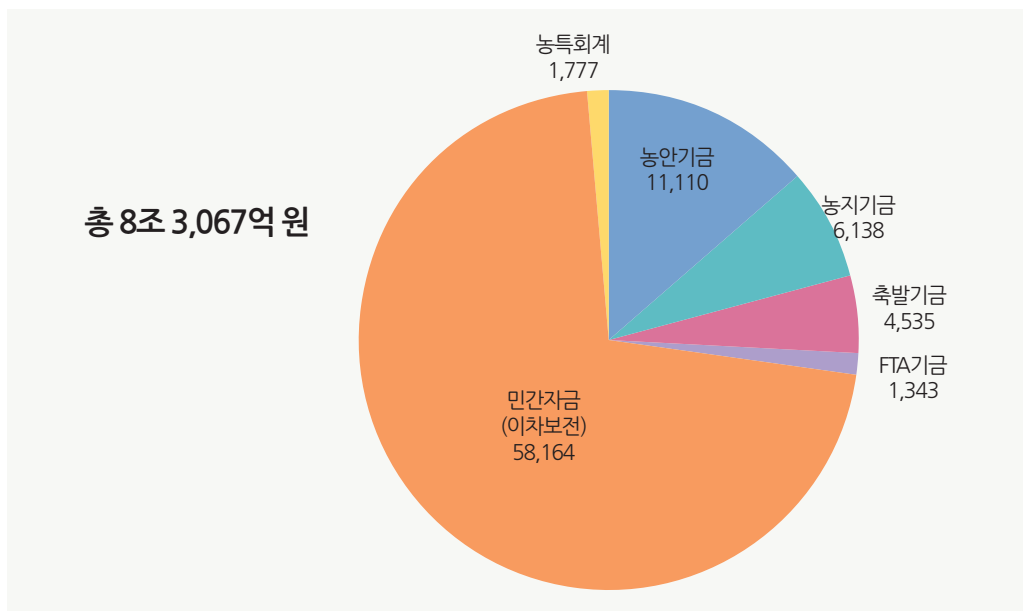


자료: 농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내부자료

- 2015년 한 해 동안 신규 지원된 정책자금은 8조 3,067억 원이며, 70%는 이차보전 형식임.
 - 이차보전금의 97.8%(5조 6,871억 원)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1.6%, 0.7%는 각각 산림조합, 시중은행에서 지원됨.
 - 재정융자로 지원된 정부자금은 전체 신규 정책자금 대비 농안기금 13.4%, 농지기금 7.4%, 촉발기금 5.5%, 농특회계 2.1%로 기록되었음.
 - 취급기관 별 신규대출 규모로는 농협 6조 9,174억 원(전체 대비 83.3%), 한국농어촌공사 6,411억 원(7.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257억 원(5.1%) 순으로 나타났음.

[농업정책자금 신규대출(2015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자료: 농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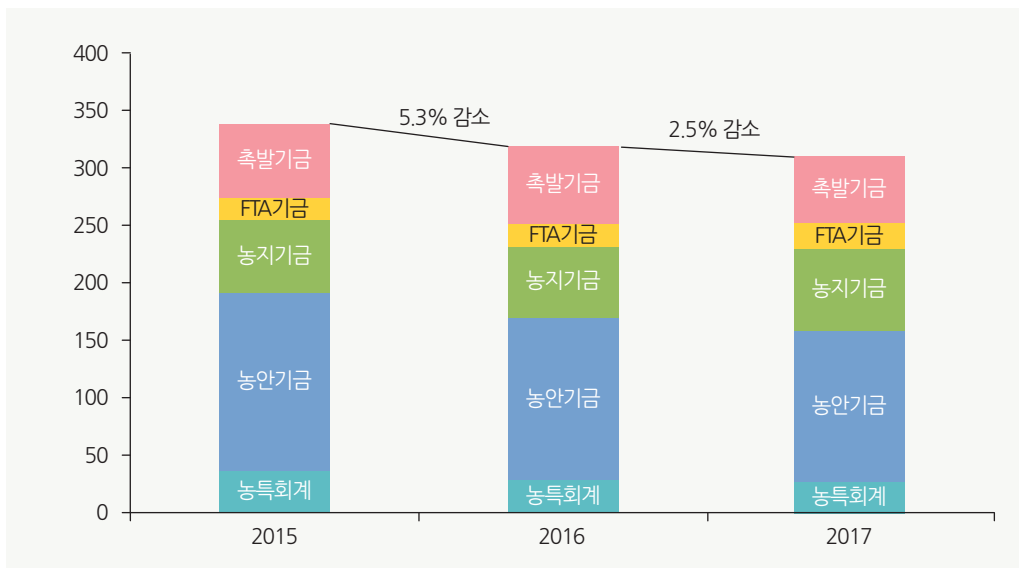
▶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현황

- 2017년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 총예산 규모는 3조 1,157억 원으로 융자금은 2조 9,056억 원, 이차보전은 2,101억 원

- 융자 및 이차보전 정책자금은 '16년 전년대비 5.3% 감소에 이어 '17년 전년대비 2.5%(797억 원) 감소
- 세부사업기준으로 보면, 융자사업 수는 '16년도 33개에서 '17년도 32개로 축소
 - 농식품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지원(융자)사업 추가, 신선농산물수출지원 사업과 가공식품 수출지원 사업 폐지
 - 단위사업기준으로는 '16년과 '17년 동일하게 18개의 사업 유지
- 회계·기금별 예산비중을 보면, 융자금은 농안기금, 농지기금, 촉발기금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이차보전은 전액 농특회계에서 지원
 - 농안기금이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5%(1조 3,235억 원)로 가장 높으며, 농산물유통, 농·식품수출, 식품산업육성 관련 사업 지원
 - 농지기금이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져 '17년 22.6%(7,032억 원)이며, 대부분 농지은행 관련 사업을 지원
 - *'15(19.1%) → '16(20.0%) → '17(22.6%)
 - 나머지 촉발기금, 농특회계, FTA기금의 비중은 각각 18.8%, 8.0%, 7.7%.

[회계·기금별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 추이]

단위: 백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현황, 각 연도
농식품부, 기금 및 예산개요, 각 연도

▶ 프로그램별 융자 및 이차보전

- 총 10개 프로그램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며,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축산업진흥, 농지은행사업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이 총 융자금 예산의 76% 차지
 -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총 6가지 융자관련 세부사업 중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과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사업이 프로그램 예산의 각각 75%, 16% 차지
 - (축산업진흥) 총 10가지 융자관련 세부사업 중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축사시설현대화(융자)가 프로그램 예산의 각각 57%, 17% 차지
 - (농지은행사업) 총 4가지 융자관련 세부사업 중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농지매입비축(융자), 농지규모화(융자)가 프로그램 예산의 각각 42%, 26%, 22% 차지
- 2016년 대비 융자금 예산변동을 보면, 6개 프로그램은 예산 증가, 3개 프로그램은 예산 감소, 1개 프로그램은 예산 유지
 - 가장 예산 감소율이 큰 프로그램은 친환경농업육성(전년대비 -29%), 축산물안전관리(전년대비 -18%), 식품산업육성(전년대비 -15%) 등이며, 예산 감소액은 식품산업육성이 927억 원, 축산업진흥이 460억 원으로 가장 높음.
 - 식품산업육성의 경우, 총 4,613억 원 규모의 신선농산물수출지원, 가공식품수출지원 사업이 폐지되고, 3,805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편성되면서 예산 감소
 - 가장 예산 증가율이 큰 프로그램은 농지은행사업(전년대비 10%)이며 증가액 또한 643억 원으로 가장 많음.
- 이차보전은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정책자금 이차보전과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으로 구성
 - (정책자금) 총 18개 항목 중 농업종합자금 711억 원, RPC 운영자금 271억 원, 농축산경영자금 259억 원, 농촌주택개량자금 251억 원 등이 전체 정책자금 이차보전의 77%를 차지
 - (부채대책자금) 총 5개 항목 중 정책자금상환연기자금 88억 원, '04정책자금대체자금 50억 원 등이 전체 부채대책자금의 85% 차지
-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이차보전 기준금리가 3.22%에서 3.09%로 인하하면서 이차보전 예산 규모가 2,180억 원에서 2,173억 원으로 감소
- 프로그램별 3년 평균 예산을 보면 '15년~'17년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이 '15년~'1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

- 가장 큰 감소를 보이는 프로그램은 농가경영안정,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프로그램으로 평균적으로 각각 1,317억 원, 1,223억 원 감소
-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의 경우, 용자 예산이 '05년 전년대비 70% (638억 원) 감소한 후로 280억 원 대 유지하고 있으며, 이차보전은 매년 감소 추세
- 예산이 증가한 프로그램은 농지은행사업,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프로그램으로 평균적으로 각각 479억 원, 65억 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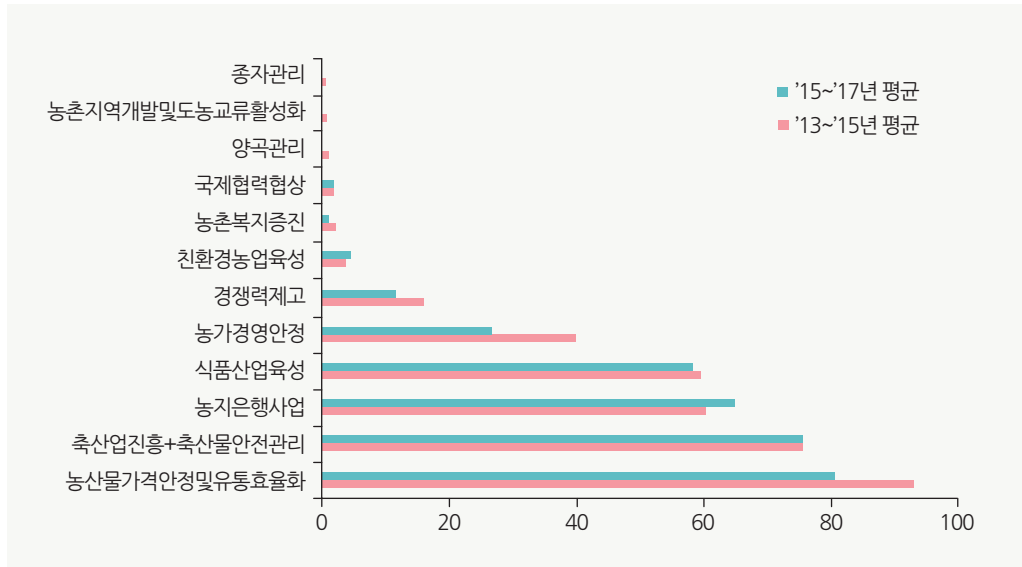
[프로그램별 용자 및 이차보전 예산]

단위: 백만 원

프로그램	2015			2016			2017		
	용자	이차 보전	전체	용자	이차 보전	전체	용자	이차 보전	전체
농가경영안정	26,200	282,553	308,753	28,300	217,459	245,759	28,500	210,123	238,623
경쟁력제고	111,194	0	111,194	118,881	-	118,881	107,496	-	107,496
축산업진흥	730,142	0	730,142	778,584	-	778,584	732,601	-	732,601
축산물안전관리	8,921	0	8,921	9,860	-	9,860	8,039	-	8,039
친환경농업육성	51,440	0	51,440	41,440	-	41,440	29,440	-	29,44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879,196	0	879,196	757,975	-	757,975	784,969	-	784,969
농지은행사업	631,979	0	631,979	626,308	-	626,308	690,600	-	690,600
농촌복지증진	11,400	0	11,400	-	-	-	-	-	-
국제협력협상	14,000	0	14,000	12,600	-	12,600	12,600	-	12,600
식품산업육성	627,800	0	627,800	604,000	-	604,000	511,340	-	511,340
합계	3,092,432	282,553	3,374,985	2,977,948	217,459	3,195,407	2,905,585	210,123	3,115,708

[프로그램별 용자 및 이차보전 예산 규모 비교]

단위: 백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현황, 각 연도
 농식품부, 기금 및 예산개요, 각 연도
 농식품부, 성과계획서, 각 연도

07 부록

거시경제 지표
2017년도 농식품부 사업별 예산
현황

07 부록

● 부록 1. 거시경제 지표

경제성장

연/월	GDP 성장률(%)		농림어업 GDP 성장률(%)		농림어업 GDP(10억원)
1995	9.6		7.0		22,919
1996	7.6		4.3		23,912
1997	5.9		4.5		24,996
1998	-5.5		-7.4		23,153
1999	11.3		5.4		24,399
2000	8.9		1.1		24,671
2001	4.5		1.6		25,060
2002	7.4		-2.1		24,522
2003	2.9		-5.3		23,220
2004	4.9		9.0		25,313
2005	3.9		1.4		25,666
2006	5.2		1.6		26,067
2007	5.5		4.1		27,128
2008	2.8		5.6		28,647
2009	0.7		3.2		29,576
2010	6.5		-4.3		28,297
2011	3.7		-2.0		27,745
2012	2.3		-0.9		27,507
2013	2.9		3.1		28,358
2014	3.3		2.6		29,087
2015 ^{p)}	2.6		-1.5		28,951
2016 ^{p)}	2.7		-2.8		28,147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분기별)
2011 I	1.0	4.9	-0.2	-9.3	4,978
II	0.7	3.6	3.4	-2.5	7,091
III	0.7	3.3	-3.2	-5.8	7,050

연/월		GDP 성장률(%)		농림어업 GDP 성장률(%)		농림어업 GDP(10억원)
2012	IV	0.6	3.0	5.9	7.1	8,626
	I	0.6	2.5	-4.5	0.1	4,981
	II	0.5	2.4	0.1	-1.8	6,964
	III	0.3	2.1	-0.6	0.0	7,048
2013	IV	0.6	2.2	2.0	-1.3	8,513
	I	0.7	2.1	-1.6	-1.2	4,921
	II	1.0	2.7	1.2	0.1	6,974
	III	0.8	3.2	3.8	4.3	7,354
2014	IV	0.9	3.5	2.8	7.0	9,109
	I	1.1	3.9	-1.6	5.9	5,212
	II	0.6	3.5	-0.4	4.5	7,285
	III	0.7	3.4	1.6	2.7	7,554
2015 ^{p)}	IV	0.3	2.7	1.7	2.4	9,327
	I	0.8	2.4	3.7	7.5	5,606
	II	0.4	2.2	-11.0	-4.0	6,993
	III	1.2	2.8	4.7	-0.8	7,491
2016 ^{p)}	IV	0.7	3.1	-2.6	-5.0	8,861
	I	0.5	2.8	6.5	-2.4	5,469
	II	0.8	3.3	-6.6	1.5	7,097
	III	0.6	2.6	-1.6	-4.6	7,147
	IV	0.4	2.3	-2.8	-4.8	8,434

주 : p)는 잠정치치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고용 (1)

연/월	전산업 취업자 (천명)	전산업 취업자 수(천명)					전산업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0	21,156	4,691	6,018	4,888	2,829	1,865	4.3	4.4
2001	21,572	4,879	6,137	5,277	2,899	1,963	2.0	4.0
2002	22,169	4,815	6,167	5,561	2,959	2,071	2.8	3.3
2003	22,139	4,799	6,212	5,856	3,098	2,204	-0.1	3.6
2004	22,557	4,606	6,186	6,031	3,174	2,142	1.9	3.7
2005	22,856	4,578	6,181	6,206	3,334	2,257	1.3	3.7
2006	23,151	4,450	6,122	6,305	3,599	2,381	1.3	3.5
2007	23,433	4,270	6,136	6,407	3,835	2,503	1.2	3.2
2008	23,577	4,203	6,035	6,484	4,093	2,618	0.6	3.2
2009	23,506	4,084	6,010	6,548	4,300	2,636	-0.3	3.6
2010	23,829	3,957	5,837	6,524	4,498	2,690	1.4	3.7
2011	24,244	3,914	5,833	6,553	4,792	2,737	1.7	3.4
2012	24,681	3,879	5,786	6,611	5,083	2,886	1.8	3.2
2013	25,066	3,843	5,756	6,622	5,353	3,108	1.6	3.1
2014	25,599	3,793	5,735	6,644	5,606	3,289	2.1	3.5
2015	25,936	3,938	5,676	6,668	5,994	3,661	1.3	3.6
2016	26,235	3,985	5,640	6,640	6,086	3,884	1.2	3.7
	(월별)	(월별)					(전년동월비)	(월별)
2014 1	24,759	3,891	5,691	6,637	5,621	2,918	2.9	3.5
2	24,819	3,869	5,662	6,630	5,676	2,982	3.5	4.5
3	25,163	3,760	5,662	6,669	5,756	3,316	2.6	3.9
4	25,684	3,817	5,710	6,710	5,871	3,576	2.3	3.9
5	25,811	3,849	5,717	6,693	5,882	3,670	1.6	3.6
6	25,875	3,864	5,736	6,710	5,882	3,684	1.6	3.5
7	25,979	4,004	5,753	6,675	5,879	3,669	2.0	3.4
8	25,885	3,955	5,734	6,668	5,880	3,649	2.3	3.3
9	25,917	3,865	5,738	6,690	5,915	3,709	1.8	3.2
10	25,951	3,850	5,723	6,711	5,936	3,731	1.6	3.2

연/월	전산업 취업자 (천명)	전산업 취업자 수(천명)					전산업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5	11	25,968	3,865	5,730	6,719	5,954	3,700	1.7	3.1
	12	25,384	3,849	5,713	6,671	5,886	3,265	1.7	3.4
	1	25,106	3,917	5,674	6,610	5,812	3,093	1.4	3.8
	2	25,195	3,898	5,680	6,582	5,859	3,175	1.5	4.6
	3	25,501	3,800	5,659	6,602	5,914	3,527	1.3	4.0
	4	25,900	3,902	5,642	6,684	5,983	3,689	0.8	3.9
	5	26,189	3,964	5,673	6,687	6,029	3,837	1.5	3.8
	6	26,205	3,935	5,681	6,698	6,037	3,854	1.3	3.9
	7	26,305	4,026	5,700	6,679	6,059	3,842	1.3	3.7
	8	26,141	3,990	5,674	6,651	6,001	3,826	1.0	3.4
	9	26,264	3,956	5,671	6,707	6,049	3,882	1.3	3.2
	10	26,298	3,951	5,676	6,744	6,062	3,867	1.3	3.1
2016	11	26,253	3,955	5,680	6,715	6,094	3,809	1.1	3.1
	12	25,879	3,959	5,702	6,662	6,028	3,528	2.0	3.2
	1	25,445	3,942	5,684	6,606	5,927	3,287	1.4	3.7
	2	25,418	3,916	5,636	6,597	5,935	3,333	0.9	4.9
	3	25,800	3,875	5,631	6,609	5,974	3,712	1.2	4.3
	4	26,153	3,945	5,620	6,632	6,059	3,897	1.0	3.9
	5	26,450	4,036	5,653	6,650	6,112	4,000	1.0	3.7
	6	26,559	4,066	5,653	6,664	6,125	4,051	1.4	3.6
	7	26,603	4,114	5,643	6,670	6,104	4,072	1.1	3.5
	8	26,528	4,046	5,612	6,661	6,125	4,084	1.5	3.6
	9	26,531	3,997	5,629	6,656	6,148	4,101	1.0	3.6
	10	26,577	3,982	5,615	6,644	6,195	4,141	1.1	3.4
11	26,592	3,936	5,654	6,670	6,206	4,126	1.3	3.1	
12	26,168	3,967	5,655	6,619	6,124	3,804	1.1	3.2	

자료: 통계청

고용 (Ⅱ)

연/월	농림어업 취업자 (천명)	농림어업 취업자 수 (천명)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율(%)	전산업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0	2,243	79	218	404	553	989	-2.6	10.6
2001	2,148	67	184	382	518	998	-4.2	10.0
2002	2,069	51	145	372	489	1,013	-3.7	9.3
2003	1,950	48	127	341	449	985	-5.8	8.8
2004	1,824	36	105	305	417	961	-6.5	8.1
2005	1,813	29	83	286	420	994	-0.6	7.9
2006	1,781	29	80	270	411	992	-1.8	7.7
2007	1,723	26	79	258	403	957	-3.3	7.4
2008	1,686	23	74	239	404	947	-2.1	7.2
2009	1,648	25	75	227	404	918	-2.3	7.0
2010	1,566	31	70	200	390	875	-5.0	6.6
2011	1,542	24	73	182	379	883	-1.5	6.4
2012	1,528	34	65	157	365	908	-0.9	6.2
2013	1,520	37	64	134	360	926	-0.5	6.1
2014	1,452	34	53	129	342	894	-4.5	5.7
2015	1,345	28	48	123	309	837	-7.4	5.2
2016	1,286							
	(월별)	(월별)					(전년동월비)	(월별)
2014 1	1,086	37	42	106	264	637	4.4	4.4
2	1,123	32	42	111	282	655	2.7	4.5
3	1,327	33	52	123	319	800	-3.0	5.3
4	1,563	40	58	138	366	961	-1.8	6.1
5	1,656	44	62	143	384	1,024	-3.4	6.4
6	1,675	42	61	148	385	1,040	-4.3	6.5
7	1,604	40	57	137	374	997	-6.5	6.2
8	1,596	33	53	134	377	998	-7.3	6.2
9	1,609	30	52	137	377	1,013	-7.4	6.2

연/월	농림어업 취업자 (천명)	농림어업 취업자 수 (천명)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율(%)	전산업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	
		29세 이하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2015	10	1,607	30	59	139	367	1,013	-8.3	6.2
	11	1,506	24	58	130	349	944	-5.3	5.8
	12	1,072	20	46	105	259	642	-8.1	4.2
	1	983	24	44	96	246	574	-9.5	3.9
	2	1,036	24	44	98	264	606	-7.7	4.1
	3	1,257	29	48	115	302	764	-5.3	4.9
	4	1,428	34	47	131	328	889	-8.6	5.5
	5	1,534	38	50	136	349	962	-7.4	5.9
	6	1,552	35	48	135	343	991	-7.3	5.9
	7	1,513	34	47	134	333	964	-5.7	5.8
	8	1,482	31	49	136	320	946	-7.1	5.7
	9	1,489	28	51	137	333	940	-7.5	5.7
2016	10	1,484	25	53	136	333	938	-7.7	5.6
	11	1,337	21	50	125	306	835	-11.2	5.1
	12	1,046	17	41	99	248	639	-2.4	4.0
	1	909						-7.5	3.6
	2	975						-5.9	3.8
	3	1,229						-2.2	4.8
	4	1,369						-4.1	5.2
	5	1,435						-6.5	5.4
	6	1,454						-6.3	5.5
	7	1,402						-7.3	5.3
	8	1,415						-4.5	5.3
	9	1,423						-4.4	5.4
10	1,438						-3.1	5.4	
11	1,368						2.3	5.1	
12	1,021						-2.4	3.9	

자료: 통계청

환율·금리

연/월	환율			시중 금리(%)		
	대 달러 (WON/USD)	대 엔화 (WON/100JPY)	대 위안화 (WON/CNY)	CD유통수익률 (91일)	국고채 (3년)	회사채 (장외3년,AA+ 등급)
2000	1,259.7	1,101.5	152.2	7.08	8.30	9.35
2001	1,326.1	1,009.4	160.2	5.32	5.68	7.05
2002	1,200.4	1,012.9	145.0	4.81	5.78	6.56
2003	1,197.8	1,119.6	144.7	4.31	4.55	5.43
2004	1,043.8	1,012.1	126.1	3.79	4.11	4.73
2005	1,013.0	859.9	125.5	3.65	4.27	4.68
2006	929.6	781.8	119.0	4.48	4.83	5.17
2007	938.2	833.3	128.5	5.16	5.23	5.70
2008	1,257.5	1,393.9	184.1	5.49	5.27	7.02
2009	1,167.6	1,262.8	171.1	2.63	4.04	5.81
2010	1,138.9	1,397.1	172.5	2.67	3.72	4.66
2011	1,153.3	1,485.2	182.5	3.44	3.62	4.41
2012	1,071.1	1,247.5	171.9	3.30	3.13	3.77
2013	1,055.3	1,004.7	174.1	2.72	2.79	3.19
2014	1,099.2	920.1	177.2	2.49	2.59	2.98
2015	1,131.5	934.6	180.1	1.77	1.79	2.08
2016	1,160.5	1,068.2	174.4	1.49	1.44	1.89
	(월평균)			(월별)		
2014 1	1,064.8	1,022.8	176.0	2.65	2.89	3.32
2	1,071.3	1,048.6	176.3	2.65	2.85	3.28
3	1,070.9	1,047.1	173.6	2.65	2.87	3.30
4	1,044.6	1,018.6	167.9	2.65	2.88	3.30
5	1,025.0	1,007.0	164.4	2.65	2.84	3.26
6	1,019.4	999.0	163.6	2.65	2.75	3.17
7	1,019.9	1,003.0	164.5	2.65	2.56	2.97
8	1,025.4	996.0	166.6	2.52	2.54	2.93
9	1,033.2	962.5	168.3	2.35	2.41	2.79
10	1,060.3	982.7	173.1	2.21	2.24	2.60
11	1,095.1	942.9	178.8	2.14	2.14	2.47

연/월	환율			시중 금리(%)			
	대 달러 (WON/USD)	대 엔화 (WON/100JPY)	대 위안화 (WON/CNY)	CD유통수익률 (91일)	국고채 (3년)	회사채 (장외3년,AA- 등급)	
2015	12	1,104.3	925.1	178.5	2.13	2.14	2.46
	1	1,088.9	919.9	175.2	2.13	2.04	2.36
	2	1,098.4	926.4	175.7	2.12	2.02	2.30
	3	1,112.6	924.4	178.2	1.95	1.87	2.13
	4	1,088.7	910.7	175.6	1.81	1.74	1.99
	5	1,091.3	904.5	175.9	1.80	1.88	2.12
	6	1,112.2	899.0	179.2	1.70	1.77	2.01
	7	1,143.2	927.5	184.1	1.65	1.78	2.00
	8	1,179.1	958.3	186.4	1.64	1.74	1.98
	9	1,184.8	985.7	186.0	1.60	1.65	1.95
	10	1,148.2	955.9	180.8	1.58	1.63	1.96
	11	1,152.0	940.3	180.9	1.59	1.75	2.12
2016	12	1,172.2	962.5	181.8	1.67	1.72	2.14
	1	1,201.7	1,017.4	181.6	1.67	1.63	2.09
	2	1,217.4	1,060.2	185.7	1.64	1.47	1.95
	3	1,188.2	1,051.7	182.6	1.63	1.50	1.98
	4	1,147.5	1,044.3	176.9	1.61	1.47	1.94
	5	1,171.5	1,074.8	179.1	1.58	1.46	1.91
	6	1,170.5	1,107.5	177.3	1.43	1.33	1.79
	7	1,144.1	1,099.1	171.1	1.36	1.22	1.65
	8	1,111.7	1,097.6	167.0	1.35	1.24	1.65
	9	1,107.5	1,087.5	165.7	1.34	1.31	1.70
	10	1,125.3	1,084.1	167.0	1.35	1.36	1.78
	11	1,161.6	1,074.2	169.5	1.42	1.61	2.02
12	1,182.3	1,019.4	170.7	1.54	1.69	2.16	

자료: 한국은행

물가

연/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2010=100)		농축수산물(2010=100)		총지수(2010=100)		농축수산물(2010=100)	
2000	73.1		62.9		79.1		68.6	
2001	76.1		66.8		78.7		71.2	
2002	78.2		71.0		78.5		73.0	
2003	80.9		75.2		80.2		77.2	
2004	83.8		81.9		85.1		86.5	
2005	86.1		83.5		86.9		83.3	
2006	88.1		83.4		87.7		81.3	
2007	90.3		85.0		88.9		83.5	
2008	94.5		85.4		96.5		84.4	
2009	97.1		90.9		96.3		91.8	
2010	100.0		100.0		100.0		100.0	
2011	104.0		109.2		106.7		107.4	
2012	106.3		112.6		107.5		108.3	
2013	107.7		111.9		105.7		101.9	
2014	109.0		108.9		105.2		102.5	
2015	109.8		111.1		101.0		104.9	
2016	110.9		115.3		99.1		111.0	
	월별지수	전년동월비	월별지수	전년동월비	월별지수	전년동월비	월별지수	전년동월비
2014 1	108.5	1.08	109.0	-5.61	105.6	-0.29	103.6	-1.83
2	108.8	1.01	110.2	-5.42	105.8	-0.85	104.4	-2.93
3	109.0	1.29	110.1	-3.13	105.7	-0.50	104.7	0.96
4	109.1	1.50	109.9	-3.49	105.6	-0.33	104.4	1.13
5	109.2	1.67	109.4	-1.95	105.6	-0.01	101.2	0.81
6	109.1	1.66	108.0	-1.01	105.6	0.06	102.2	3.04
7	109.3	1.59	108.2	-2.20	105.7	0.15	102.3	2.53
8	109.5	1.41	109.8	-4.79	105.6	-0.23	103.6	-1.54
9	109.4	1.15	111.1	-3.01	105.2	-0.48	102.1	-1.40
10	109.1	1.15	107.1	-1.88	104.5	-0.84	98.2	0.61

연/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2010=100)		농축수산물(2010=100)		총지수(2010=100)		농축수산물(2010=100)		
2015	11	108.8	0.96	106.1	-0.08	104.1	-0.94	100.7	2.64
	12	108.8	0.83	107.9	1.02	103.1	-2.14	103.2	4.49
	1	109.4	0.80	109.8	0.73	101.9	-3.59	101.9	-1.64
	2	109.4	0.51	111.4	1.09	101.9	-3.64	106.2	1.74
	3	109.4	0.36	109.2	-0.79	101.8	-3.72	103.7	-0.87
	4	109.5	0.39	109.3	-0.49	101.8	-3.61	105.5	1.05
	5	109.8	0.53	112.4	2.74	101.8	-3.52	107.9	6.62
	6	109.8	0.68	112.5	4.10	101.8	-3.62	105.6	3.41
	7	110.0	0.71	112.1	3.69	101.4	-4.05	107.9	5.43
	8	110.2	0.70	113.6	3.44	100.8	-4.54	108.1	4.40
	9	110.0	0.60	113.0	1.70	100.3	-4.62	104.8	2.67
	10	110.1	0.92	110.4	3.03	99.7	-4.60	100.3	2.16
2016	11	109.9	1.00	107.9	1.70	99.3	-4.69	102.4	1.69
	12	110.2	1.28	111.1	2.93	99.0	-3.97	104.6	1.36
	1	110.3	0.81	112.4	2.44	98.5	-3.31	107.3	5.34
	2	110.8	1.29	117.6	5.57	98.5	-3.38	111.3	4.84
	3	110.5	0.99	115.2	5.45	98.4	-3.32	111.1	7.09
	4	110.6	1.03	115.3	5.48	98.7	-3.04	112.6	6.73
	5	110.7	0.76	113.9	1.29	98.7	-3.09	107.9	0.02
	6	110.7	0.76	111.7	-0.71	99.0	-2.72	106.1	0.41
	7	110.8	0.71	112.4	0.23	98.9	-2.46	106.6	-1.17
	8	110.7	0.40	114.7	0.95	99.0	-1.77	113.6	5.04
	9	111.4	1.21	124.5	10.21	99.2	-1.10	119.8	14.32
	10	111.5	1.30	119.4	8.13	99.5	-0.13	113.2	12.88
11	111.3	1.27	116.8	8.21	100.0	0.73	110.5	7.98	
12	111.4	1.11	118.9	7.03	100.8	1.79	112.2	7.34	

자료: 통계청

수출입

연/월	수출액				수입액			
	상품(백만 USD)		농림축산물(백만 USD)		상품(백만 USD)		농림축산물(백만 USD)	
2000	169,524		1,509		153,893		8,433	
2001	146,417		1,580		136,578		8,448	
2002	160,952		1,640		146,048		9,584	
2003	194,908		1,860		172,431		10,221	
2004	256,050		2,085		216,772		11,220	
2005	285,254		2,222		252,942		11,889	
2006	329,103		2,304		303,928		13,327	
2007	382,789		2,532		349,951		16,183	
2008	432,894		3,048		420,697		20,120	
2009	363,901		3,298		316,087		18,346	
2010	463,770		4,082		415,854		22,330	
2011	587,100		5,384		558,010		28,994	
2012	603,509		5,645		554,103		29,447	
2013	618,157		5,725		535,376		30,299	
2014	613,021		6,183		524,135		31,635	
2015	542,881		6,107		420,612		30,215	
2016	511,776		6,468		391,330		29,671	
	월별수출액	전년동월비	월별수출액	전년동월비	월별수입액	전년동월비	월별수입액	전년동월비
2014 1	50,116	-3.2	458	1.2	46,268	-3.2	2,485	-10.0
2	47,606	6.0	457	15.9	41,502	-0.4	2,383	6.7
3	53,750	5.1	514	10.0	46,106	4.7	2,580	4.2
4	56,092	8.5	555	13.5	46,024	-0.4	2,819	4.6
5	51,958	-2.8	523	4.8	43,171	-2.1	2,632	-2.6
6	49,955	2.2	517	8.1	43,634	1.1	2,716	6.5
7	52,416	-1.7	523	10.5	46,739	1.9	2,882	14.1
8	48,151	-3.5	504	13.7	41,110	-3.6	2,503	7.5
9	50,254	-0.5	510	13.4	41,995	0.2	2,695	18.0
10	51,029	-10.2	560	3.8	43,045	-8.5	2,799	6.5
11	49,242	-6.6	517	1.5	39,649	-11.3	2,423	-0.8

연/월	수출액				수입액				
	상품(백만 USD)		농림축산물(백만 USD)		상품(백만 USD)		농림축산물(백만 USD)		
2015 ^{p)}	12	52,453	-1.1	544	3.1	44,893	-2.9	2,718	1.7
	1	44,427	-11.4	494	7.9	37,566	-18.8	2,636	6.1
	2	39,431	-17.2	419	-8.1	32,369	-22.0	2,172	-8.9
	3	47,569	-11.5	523	1.8	36,976	-19.8	2,696	4.5
	4	49,644	-11.5	552	-0.6	37,794	-17.9	2,709	-3.9
	5	43,406	-16.5	479	-8.5	34,538	-20.0	2,593	-1.5
	6	49,036	-1.8	530	2.6	36,087	-17.3	2,645	-2.6
	7	47,222	-9.9	525	0.3	36,917	-21.0	2,694	-6.5
	8	42,081	-12.6	457	-9.3	33,232	-19.2	2,378	-5.0
	9	44,248	-12.0	529	3.7	32,082	-23.6	2,378	-11.8
	10	46,262	-9.3	548	-2.1	35,290	-18.0	2,440	-12.8
	11	43,126	-12.4	509	-1.4	32,491	-18.1	2,331	-3.8
2016 ^{p)}	12	46,429	-11.5	541	-0.6	35,270	-21.4	2,543	-6.4
	1	37,340	-16.0	464	-6.1	29,154	-22.4	2,414	-8.4
	2	36,292	-8.0	446	6.4	28,365	-12.4	2,159	-0.6
	3	44,685	-6.1	566	8.1	31,842	-13.9	2,555	-5.3
	4	40,434	-18.6	517	-6.3	30,587	-19.1	2,490	-8.1
	5	42,546	-2.0	541	13.0	31,688	-8.3	2,593	0.0
	6	45,263	-7.7	563	6.1	32,434	-10.1	2,461	-7.0
	7	42,364	-10.3	522	-0.5	31,698	-14.1	2,426	-9.9
	8	41,281	-1.9	543	18.9	34,341	3.3	2,499	5.1
	9	43,913	-0.8	556	5.0	33,251	3.6	2,366	-0.5
	10	43,339	-6.3	572	4.3	33,509	-5.0	2,498	2.4
	11	46,366	7.5	628	23.3	35,941	10.6	2,658	14.0
12	47,953	3.3	550	1.7	38,520	9.2	2,553	0.4	

주: 1) 수출액은 상품수출액 기준임.

2) 수입액은 FOB조건의 상품수입액 기준임.

3) p)는 잠정치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 부록 2.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현황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수산인력양성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 (책임운영)	한국농수산대학인건비(책임운영)	6,647	I-4-일반재정(1)	
		한국농수산대학기본경비(책임운영, 총액인건비대상)	432	I-4-일반재정(1)	
		한국농수산대학기본경비(책임운영, 총액인건비비대상)	3	I-4-일반재정(1)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36,481	I-4-일반재정(1)	
		전공심화과정운영(책임, 수입대체)	226	I-4-일반재정(1)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 (정보화, 책임운영)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운영(정보화)	1,231	I-4-정보화(1)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농식품기술개발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 (R&D)(농림부)	400	I-6-R&D(2)	
농업생산기반확충	농어촌공사시설관리	수리시설유지관리	154,700	III-2-일반재정(5)	
	농업기반시설활용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23,000	III-2-일반재정 (10)	
국제협력협상	국제협력협상	국제농업협력(ODA)	17,253	II-3-일반재정(1)	
		농업협상대응	2,079	II-3-일반재정(1)	
		국제기구분담금	1,692	II-3-일반재정(1)	
		국제기구분담금(ODA)	14,763	II-3-일반재정(1)	
농림축산검역검사	검역검사정보화(정보화)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8,907	V-4-정보화(1)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10,427	V-4-일반재정(2)	
		동식물검역검사(ODA)	348	V-4-일반재정(2)	
	동축산물검역검사	동축산물검역검사	8,012	V-4-일반재정(1)	
		축산식품안전관리	1,739	V-4-일반재정(1)	
	검역검사(R&D)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20,932	V-4-R&D(1)	
종자관리	종자원인건비	(총액)종자원인건비	11,964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공무원)
	종자원기본경비	(총액)종자원기본경비	2,119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종자관리	종자원기본경비	(총액)종자원전산운영경비	2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종자원공익근무요원운용	1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종자원기본경비	16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종자원전산운영경비	8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경비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2,135	1-5-일반재정(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450	1-5-일반재정(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 (경보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경보화)	457	1-5-경보화(1)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본부인건비	(총액)인건비	53,807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공무원)
	소속기관인건비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	81,980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공무원)
		(총액)농식품공무원교육원인건비	2,735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공무원)
		(총액)농림축산검역본부인건비	61,060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공무원)
	본부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2,018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기획실)	140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농업정책국)	9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식량정책관)	77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국제협력국)	20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농촌정책국)	89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참조농식품정책관)	72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축산정책국)	77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공익근무요원운용(운영지원과 등)	2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식품산업정책관)	76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2,803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기획실)	1,610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농업정책국)	360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식량정책관)	50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국제협력국)	40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농촌정책국)	35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창조농식품정책관)	368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축산정책국)	448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공익근무요원운용(운영지원과 등)	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식품산업정책관)	330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유통소비정책관)	72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유통소비정책관)	36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2,34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전산운영경비	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근무요원운용	1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농식품공무원교육원기본경비	107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농식품공무원교육원공익근무요원운영	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6,676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산물품질관리원전산운영경비	49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근무요원운용	12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식품공무원교육원기본경비	68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전산운영경비	73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공익근무요원운용	5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농림축산검역본부기본경비	1,552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총액)농림축산검역본부공익요원경비	135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림축산검역본부기본경비	3,307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	1,61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농림축산검역본부공익요원경비	5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행정지원	행정운영	228	Ⅲ-4-일반재정(1)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정책협업 지원	1,169	Ⅲ-4-일반재정(1)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413	Ⅲ-4-일반재정(1)	
		혁신도시 이전지원(한국농수산대학)	34	Ⅲ-4-일반재정(1)	
		혁신도시 이전지원(검역본부)	1,205	Ⅲ-4-일반재정(1)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청사시설지원(본부)	275	Ⅲ-4-일반재정(2)	
		청사시설관리(농관원)	2,968	Ⅲ-4-일반재정(2)	
		청사시설지원(종자원)	486	Ⅲ-4-일반재정(2)	
		청사시설관리(검역본부)	11,944	Ⅲ-4-일반재정(2)	
회계간거래(전출금)	회계간전출(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구조개선)으로 전출금	3,388,365	성과관리 비대상	정부내부거래
		일반회계에서 양특회계로 전출금	842,656	성과관리 비대상	정부내부거래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전출(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양국기금으로 전출금	176,991	성과관리 비대상	정부내부거래
〈일반회계〉합계					
총 단위사업수	22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14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가경영안정	농협사업구조개편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58,345	Ⅲ-1-일반재정(3)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	286,995	Ⅲ-1-일반재정(1)	
	재해대책	재해대책비	48,000	Ⅲ-1-일반재정(2)	
		재해대책비(응자)	28,500	Ⅲ-1-일반재정(2)	
	정책자금관리	농업정책자금관리	2,760	Ⅲ-1-일반재정(4)	
	이차보전	농업자금이차보전	210,519	Ⅲ-1-일반재정(5)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가경영안정	농업기계장비	농기계임대	28,500	III-1-일반재정(6)	
양곡관리	식량생산유통지원	들녘경영체육성	11,114	V-2-일반재정(2)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4,880	V-2-일반재정(2)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자재지원	220,940	V-3-일반재정(1)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5,800	V-3-일반재정(1)	
식품산업육성	식품산업육성	식품기능성평가	2,636	II-2-일반재정(1)	중소기업 지원 세부사업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1,735	II-2-일반재정(1)	
		푸드서비스 선진화	1,800	II-2-일반재정(1)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7,708	II-2-일반재정(1)	중소기업 지원 세부사업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14,431	II-2-일반재정(1)	
	식품안전및규격(농특)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9,581	II-2-일반재정(3)	
	농식품수출촉진	대중국수출유망품목육성	4,400	II-2-일반재정(7)	
		수출인프라강화	43,478	II-2-일반재정(7)	
		할랄식품산업육성	7,134	II-2-일반재정(7)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8,420	II-2-일반재정(7)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산물유통개선(농특)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22,668	II-1-일반재정(2)	
	농업관측	농업관측	8,339	II-1-일반재정(6)	
경쟁력제고	경쟁력제고(농특)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1,731	I-1-일반재정(1)	
경쟁력제고	경쟁력제고(농특)	슬로라이프국제대회지원	500	I-1-일반재정(1)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3,243	I-1-일반재정(1)	
		농림수산물교육문화경보원 기관운영비 지원	12,782	I-1-일반재정(1)	
		스마트 농정 통제체계 구축	1,800	I-1-일반재정(1)	
		발작물산업육성	8,450	I-1-일반재정(1)	
		농산업창업지원(시범사업)	4,690	I-1-일반재정(1)	
		기후변화실태조사	400	I-1-일반재정(1)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경쟁력제고	경쟁력제고(농특)	수직형농강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	644	I-1-일반재정(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500	I-1-일반재정(1)	
		농기자재수출활성화	617	I-1-일반재정(1)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농특)	시도가축방역	107,829	V-5-일반재정(1)	
		살처분보상금	40,000	V-5-일반재정(1)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2,419	V-5-일반재정(1)	
		동물용의약품산업융합지원	630	V-5-일반재정(1)	
		동물용의약품산업융합지원(융자)	7,883	V-5-일반재정(1)	
농업생산기반확충	재해예방(농특)	배수개선	291,500	III-2-일반재정(2)	
		한발대비용수개발	12,500	III-2-일반재정(2)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37,000	III-2-일반재정(2)	
	대단위농업개발 및 시설정비	대단위농업개발(농특)	87,200	III-2-일반재정(4)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28,400	III-2-일반재정(4)	
	농업시설개선(농특)	농촌용수관리	38,553	III-2-일반재정(3)	
		수리시설개보수	474,300	III-2-일반재정(3)	
	다목적 용수개발	농촌용수개발	365,970	III-2-일반재정(6)	
	채무상환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12,854	성과관리 비대상	차입이자상환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농촌지역개발(농특)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2,678	IV-3-일반재정(2)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	11,800	IV-3-일반재정(2)	
농산물품질관리	농산물안전성관리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13,020	V-1-일반재정(1)	
		농산물안전성조사	20,051	V-1-일반재정(1)	
		농산물안전성조사(ODA)	69	V-1-일반재정(1)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4,045	V-1-일반재정(1)	
농산물품질관리	농산물안전성관리	농산물원산지관리	15,773	V-1-일반재정(1)	
	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	5,509	V-1-정보화(1)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림축산검역검사	가축검역(농특)	가축방역	14,933	V-4-일반재정(3)	
종자관리	종자산업육성(농특)	시설현대화및품질관리(종자원)	9,396	I-2-일반재정(1)	
		품종심사및재배시험	17,714	I-2-일반재정(1)	
		원원종및원종생산	4,809	I-2-일반재정(1)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ODA)	419	I-2-일반재정(1)	
	종자원정보화(정보화)	종자원정보화(정보화)	1,429	I-2-정보화(1)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농업정보환경지원(정보화)	농업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	3,955	III-4-정보화(3)	
		농식품ICT융복합촉진(정보화)	3,052	III-4-정보화(3)	
	정책연구개발(R&D)	정책연구개발사업(R&D)	2,139	성과관리 비대상	기타부처특성(대외공개 곤란)
	농림행정정보화(정보화)	행정정보화(정보화)	4,851	III-4-정보화(1)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정보화)	2,952	III-4-정보화(1)	
	농업농촌알리기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5,691	III-4-일반재정(3)	
회계간거래(전출금)	회계간전출(농특회계)	농특회계(구조개선)에서 지특회계(생활기반)로 전출금	1,291,126	성과관리 비대상	정부내부거래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전출(농특회계)	농특회계에서 FTA기금지원	286,096	성과관리 비대상	정부내부거래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농특회계)	농특회계에서 공자기금(총괄계정) 이자상환	31,231	성과관리 비대상	정부내부거래
농가경영안정	농가소득보전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816,000	III-1-일반재정(7)	
		경영이양직불	54,517	III-1-일반재정(7)	
		조건불리지역직불	47,220	III-1-일반재정(7)	
		경관보전직불	11,592	III-1-일반재정(7)	
		친환경농업직불	41,096	III-1-일반재정(7)	
		발농업직불제	190,646	III-1-일반재정(7)	
농업경영체육성	전문농업경영체육성 및 교육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33,503	I-3-일반재정(1)	
		경영체유형별맞춤형지원	340	I-3-일반재정(1)	
		농업경영체등록	21,621	I-3-일반재정(1)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농식품기술개발	Golden Seed 프로젝트(R&D)(농림부)	20,450	I-6-R&D(1)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농식품기술개발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R&D)(농림부)	4,732	I-6-R&D(1)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농식품기술개발	농림수산물식품 기술기획평가원(R&D)	8,320	I-6-R&D(1)	
		농촌개발시험연구(R&D)	2,018	I-6-R&D(1)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37,239	I-6-R&D(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	34,400	I-6-R&D(1)	
		기술사업화지원(R&D)	10,284	I-6-R&D(1)	
		첨단생산기술개발(R&D)	29,909	I-6-R&D(1)	
		수출전략기술개발(R&D)	17,501	I-6-R&D(1)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지원(R&D)	7,347	I-6-R&D(1)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R&D)	7,724	I-6-R&D(1)	
농촌복지증진	농촌복지증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344,431	IV-2-일반재정(1)	
		취약농가인력지원	8,610	IV-2-일반재정(1)	
		농업인안전재해보험	59,295	IV-2-일반재정(1)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1,805	IV-2-일반재정(1)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	13,700	IV-2-일반재정(1)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농촌지역개발(농특)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17,060	IV-3-일반재정(1)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14,568	IV-3-일반재정(1)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2,140	IV-3-일반재정(1)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31,327	IV-3-일반재정(1)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5,314	IV-3-일반재정(1)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전출(농특회계)	농특회계에서 농업소득직접지불기금으로 전출금	1,373,779	성과관리 비대상	정부내부거래
계정간거래(전출금)	구조개선계정전출	농특세계정에서 구조개선계정으로전출금	1,364,717	성과관리 비대상	정부내부거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합계					
총 단위사업수	40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33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경쟁력제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투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	33,952	I-1-일반재정(4)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3,649	I-1-일반재정(4)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15,401	I-1-일반재정(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합계					
총 단위사업수	2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2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0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식품산업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25,393	II-2-일반재정(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제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제주)	2,940	II-2-일반재정(5)	
농업생산기반확충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정비	170,928	III-2-일반재정(7)	
	농업기반정비(제주)	농업기반정비(제주)	19,563	III-2-일반재정(8)	
	농업기반정비(세종)	농업기반정비(세종)	1,000	III-2-일반재정(9)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52,628	IV-3-일반재정(6)	
	일반농산어촌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	849,041	IV-3-일반재정(3)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154,529	IV-3-일반재정(3)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2,835	IV-3-일반재정(7)	
		토양개량제사업(제주)	2,297	IV-3-일반재정(7)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8,219	IV-3-일반재정(4)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세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세종)	795	IV-3-일반재정(8)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5,074	IV-3-일반재정(5)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농업인프라구축(지특)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자체)	7,747	V-3-일반재정(2)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특)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6,900	V-5-일반재정(3)	
〈지역발전특별회계〉 합계					
총 단위사업수	13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13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0

양곡관리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양곡관리	양곡매입 및 관리	정부양곡매입비	763,677	V-2-일반재정(1)	
		수입양곡대	357,026	V-2-일반재정(1)	
		정부양곡관리비	247,796	V-2-일반재정(1)	
		쌀소비활성화	6,400	V-2-일반재정(1)	
	채무상환(양특)	한은차입금이자상환	11,900	성과관리 비대상	차입이자상환
한은차입금원금상환	한은차입금원금상환	한은차입금원금상환	51,000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양곡관리특별회계〉 합계					
총 단위사업수	3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1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2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소관)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공용재산취득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취득	10,754	III-4-일반재정(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영남검역계류장 신축	18,000	III-4-일반재정(5)	
		농림축산식품부 영남검역탐지건센터 신축	28	III-4-일반재정(5)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장어린이집 신축	100	III-4-일반재정(5)	
〈국유재산관리기금〉 합계					
총 단위사업수	2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2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0

양곡증권정리기금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양곡기금)	양곡기금에서 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1,577,500	성과관리 비대상	정부내부거래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양곡기금)	양곡기금에서 공자기금 예수금이자상환	179,475	성과관리 비대상	정부내부거래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양곡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양곡기금)	23,867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양곡증권정리기금〉 합계					
총 단위사업수	3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0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용자)	29,440	V-3-일반재정(4)	
식품산업육성	농산물수출촉진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0,539	II-2-일반재정(6)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지원(용자)	380,500	II-2-일반재정(6)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22	II-2-일반재정(6)	
	식품산업육성(농안)	전통발효식품육성	13,732	II-2-일반재정(2)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120,280	II-2-일반재정(2)	중소기업 지원 세부사업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용자)	8,360	II-2-일반재정(2)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비축지원	604,618	II-1-일반재정(1)	
		자조금지원	7,630	II-1-일반재정(1)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10,000	II-1-일반재정(1)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16,481	II-1-일반재정(1)	
	산지유통활성화(농안·용자)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589,300	II-1-일반재정(4)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용자)	8,245	II-1-일반재정(3)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8,191	II-1-일반재정(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용자)	18,973	II-1-일반재정(3)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2,359	II-1-일반재정(3)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33,168	II-1-일반재정(3)	
		농산물마케팅지원	6,562	II-1-일반재정(3)	
	소비자유통활성화	도매유통활성화지원	650	II-1-일반재정(5)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127,351	II-1-일반재정(5)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4,402	II-1-일반재정(5)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소비자유통활성화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	38,300	II-1-일반재정(5)	
종자관리	종자수급조절	종자수매·공급	63,393	I-2-일반재정(2)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기금운영비(농안기금)	인건비	76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타경비	455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유통개선사업 운영	48,36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농안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농안기금)	355,661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비통화금융기관예치(농안기금)	295,274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합계					
총 단위사업수	10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8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2

농지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지은행(농지, 용자)	농지은행(농지, 용자)	경영화생지원농지매입(용자)	290,000	IV-1-일반재정(1)	
		농지규모화(용자)	154,300	IV-1-일반재정(1)	
		농지매입비축(용자)	180,000	IV-1-일반재정(1)	
		농지연금(용자)	66,300	IV-1-일반재정(1)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업생산기반확충	대단위농업개발(농지)	대단위농업개발(농지)	49,276	III-2-일반재정(1)	
		새만금지구(내부개발)	223,400	III-2-일반재정(1)	
		새만금지구(유지관리 및 부대사업)	16,400	III-2-일반재정(1)	
국제협력협상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2,598	II-3-일반재정(2)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12,600	II-3-일반재정(2)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농지관리정보화(정보화)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1,949	III-4-정보화(2)	
	기금운영비(농지기금)	인건비	1,000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타경비	619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지은행인적역량강화사업	330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지은행사업관리비	61,71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조성토지관리 처분비	2,009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기금운영비(농지기금)	농지이용관리지원	4,238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9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기금운영비(농지기금)	농지제도개선홍보	18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농지기금에서 농특회계로 전출	400,000	성과관리 비대상	정부내부거래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농지기금)	농지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	300,000	성과관리 비대상	정부내부거래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농지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농지기금)	233,504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비통화금융기관예치(농지기금)	69,836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농지관리기금〉 합계					
총 단위사업수	8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4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4

축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축산업진흥	축산물수급관리	축산자조금	26,000	III-3-일반재정(1)	
		축산물수급관리	78,763	III-3-일반재정(1)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763	III-3-일반재정(1)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축산업진흥	축산기술보급	가축개량지원(용자)	9,000	Ⅲ-3-일반재정(2)	
		가축개량지원	43,437	Ⅲ-3-일반재정(2)	
	축산업경쟁력제고	사료산업종합지원(용자)	61,566	Ⅲ-3-일반재정(3)	
		말산업육성지원	31,211	Ⅲ-3-일반재정(3)	
		말산업육성지원(용자)	3,340	Ⅲ-3-일반재정(3)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용자)	420,000	Ⅲ-3-일반재정(3)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4,000	Ⅲ-3-일반재정(3)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용자)	4,000	Ⅲ-3-일반재정(3)	
		친환경축산(축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용자)	22,424	Ⅲ-3-일반재정(6)
	조사료생산기반확충		81,839	Ⅲ-3-일반재정(6)	
	가축분뇨처리지원(용자)		65,822	Ⅲ-3-일반재정(6)	
	가축분뇨처리지원		43,150	Ⅲ-3-일반재정(6)	
	축산물안전관리	축산물위생안전성(축발)	축산물품질관리	33,749	V-5-일반재정(4)
도축검사운영			14,872	V-5-일반재정(4)	
축산물위생안전성(축발)		축산물HACCP지원	1,650	V-5-일반재정(4)	
가축방역(축발)		가축위생방역지원	40,479	V-5-일반재정(2)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기금운영비(축발기금)	인건비	975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타경비	46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제고	1,98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축발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축발기금)	77,138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비통화금융기관예치(축발기금)	99,416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축산발전기금〉 합계					
총 단위사업수	8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6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2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가경영안정	쌀소득변동직불(직불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1,490,000	Ⅲ-1-일반재정(8)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기금운영비(직불기금)	인건비	16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타경비	2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관리비	7,787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자기금이자상환(직불기금)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115	성과관리 비대상	정부내부거래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직불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쌀기금)	23,530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비통화금융기관예치(쌀기금)	32,885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합계					
총 단위사업수	4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1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가경영안정	직접피해지원(FTA기금)	피해보전직불	100,478	Ⅲ-1-일반재정 (10)	
		폐업지원	102,717	Ⅲ-1-일반재정 (1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4,480	Ⅲ-1-일반재정 (10)	
농업경영체육성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	농식품모태펀드출자	20,000	I-3-일반재정(2)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5,500	V-3-일반재정(3)	
경쟁력제고	과수및원예경쟁력제고	과수 생산유통지원(용자)	56,061	I-1-일반재정(2)	
		과수 생산유통지원	58,684	I-1-일반재정(2)	
		원예시설현대화	51,355	I-1-일반재정(2)	
		원예시설현대화(용자)	36,034	I-1-일반재정(2)	
	종자 경쟁력제고	종자산업기반구축	9,338	I-1-일반재정(3)	
축산업진흥	축산업경쟁력제고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 지원(용자)	10,000	Ⅲ-3-일반재정(4)	
		원유소비활성화(용자)	10,000	Ⅲ-3-일반재정(4)	
	축사시설현대화(FTA)	축사시설현대화(용자)	126,915	Ⅲ-3-일반재정(5)	
		축사시설현대화	27,984	Ⅲ-3-일반재정(5)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기금운영비(FTA기금)	인건비	270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타경비	17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	133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FTA사업계획수립및관리비	1,033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과원규모화사업관리비	2,48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FTA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FTA기금)	34,817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비통화금융기관예치(FTA기금)	38,928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합계					
총 단위사업수	9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7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7 예산	과제 코드	비고
농가경영안정	농어업재해보험재보험금	재보험금	5,000	Ⅲ-1-일반재정(9)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기금운영비(재해재보험기금)	인건비	402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타경비	149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운영비	106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31,268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비통화금융기관예치(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0,130	성과관리 비대상	보전지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합계					
총 단위사업수	3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1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2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합계					
총 단위사업수	127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수	92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수	35

발행일 2017. 03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이호문화사((주)프리비)

전남 나주시 시청길 21-7 1층

tel: 061-332-1492

fax: 061-332-1491

e-mail: iho2525@hanmail.net

www.pribe.co.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제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농식품 재정사업 리포트

Agrifood Fiscal Report

